

발간등록번호 : 11-1371000-000749-01

건축문화예술 진흥정책 개발 연구

2017. 3.



문화체육관광부

<차 례>

1. 서	
1.1 건축문화	1
1.2 건축문화와 건설	2
1.3 건축문화예술 진흥정책	4
1.4 건축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지금까지 연구 현황	7
2. 국내 건축문화 현황과 개선 방향	
2.1 건축기본법 활성화 방안 필요	11
2.1.1 건축기본법의 의의	11
2.1.2 건축기본법 제정 이후 나타난 성과	13
2.1.3 건축기본법의 한계	21
2.2 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 개선 필요	23
2.2.1 문화 관련법에서 건축에 대한 이해 부족	23
2.2.2 국내 문화예술공간의 질적 개선 필요	26
2.3 문화재 관리 방안 개선 필요	29
2.3.1 경직된 보존 중심의 문화재 관리 체계	29
2.3.2 근대 건축문화유산 관리 및 활용의 한계	31
2.4 건축전문교육 및 연구 활동 개선 방안 필요	32
2.4.1 건축전문교육 및 연구 활동 개선 방안 필요	32
2.4.2 신진 건축 전문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 필요	34
2.4.3 특화된 건축교육 프로그램 개발 필요	36
2.4.4 공학 중심의 교육 및 연구 활동 탈피 필요	37
3. 프랑스 국가건축전략 보고서 시사점	
3.1 프랑스 국가건축전략 보고서 개요 및 주요 내용	39
3.2 프랑스 국가건축전략 보고서 주요 실행 조치 검토 및 국내 도입 방향	42
3.2.1 일반 대중과 건축 관계자의 건축에 대한 관심 향상	42
3.2.2 20세기, 21세기 건축 유산 고려 및 기존 건축의 가치 향상	45
3.2.3 교육-연구-실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실무와 생활환경의 연계 강화	48
3.2.4 건축역량 강화	51
3.2.5 건축의 경제적 가치 파악 및 업무 영역 확대 지원	54
3.2.6 실험방식과 그 문화적 가치 지원	57
3.3 실행사업들의 주요 시사점	58

4.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4.1 정책방향과 실행사업	60
4.1.1 정책방향과 실행사업 도출 방안	60
4.1.2 6가지 정책방향과 21가지 실행사업	61
4.1.3 21가지 실행사업 예상 로드맵	62
4.2 실행사업 내용	63
4.2.1 건축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63
4.2.2 건축문화 확산, 환경개선	68
4.2.3 건축문화 심화를 위한 건축교육과 건축연구 강화	71
4.2.4 건축 역량강화	76
4.2.5 건축의 경제효과 증대	79
4.2.6 미래를 선도하는 건축	84
5. 향후 연구 방향	87
참고문헌	91
부록	
01 프랑스 국가건축전략보고서 원본 및 번역본	
02 프랑스 국가건축전략 싱크탱크 보고서 원본 및 번역본	
03 덴마크 국가건축정책 보고서 원본	
04 제1차 국가건축정책보고서 5장	
05 제1차 서울특별시 건축기본계획의 세부과제 추진계획	
06 서울 총괄건축가 도입 및 발주체계 개선 방안 마련 연구보고서 요약본	
07 서울시 공공건축가 제도 소개 및 성과 (신춘규, 건축과 사회 2014)	
08 건축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09 문화체육관광부 공간환경조성 사업 목록 (2015년 예산사업)	

<표 차례>

표 1-1 “국가 건축문화정책의 방향 제시 및 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추진 항목	8
표 1-2 부처별 업무 현황	9
표 1-3 부처별 건축문화정책 업무 재설정 방향	10
표 2-1 건축기본법 실행수단에 따른 성과와 의미	13
표 2-2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 목표, 전략, 사업 내용 및 성과	15
표 2-3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사업 중 국토교통부 외 타부서 주관 사업	16
표 2-4 제1차 서울시 건축기본계획 목표, 전략, 사업 내용 및 성과	17
표 2-5 제1차 서울시 기본계획 과제 중 주택본부 외 타부서 사업	18
표 2-6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산하 부서 및 주요 업무 내용	19
표 2-7 2016년 공공 문화예술공간 조성 현황	26
표 2-8 연도별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산업 사업체 수, 종사자 수	32
표 2-9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산업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32
표 2-10 2010년 종사자 규모별 매출액	33
표 2-11 2012년 매출별 규모별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사업체 종사자	33
표 2-12 2015년 5년제 대학 입학정원 현황	34
표 2-13 2015년 5년제 대학 졸업자 현황	35
표 2-14 2010-2015년 5년제 인증 대학 졸업생 건축 및 건축 관련분야 취업현황	35
표 2-15 연도별 5년제 졸업자 건축사자격시험 응시 및 취득 현황	36
표 2-16 학생수행평가 항목과 건축학교육 인증기준	36
표 2-17 국토부 산하 주요 연구소 및 연구조 주요활동 내용	38
표 3-1 프랑스 국가건축전략 보고서 전략 및 실행조치	40
표 3-2 프랑스 국가건축전략보고서 이후 추진 일정	41
표 4-1 국내 현황 문제점과 실행사업 도출	60
표 4-2 6가지 정책방향과 21가지 실행사업 목록	61
표 4-3 단계별 실행사업 목록	62

<그림 차례>

그림 1-1 한류이미지	1
그림 1-2 스위스화폐	1
그림 1-3 유로화 통용 이전 핀란드 화폐	1
그림 1-4 세계 각국의 올림픽 경기장	2
그림 1-5 프랑스 2015 국가건축전략 보고서 표지	5
그림 1-6 프랑스 2015 국가건축전략 싱크탱크보고서 표지	5
그림 2-1 부산문화회관(좌), 광주문예회관(우)	27
그림 2-2 리모델링을 통해서 가로 공간과 연결성 향상 사례	27
그림 4-1 정부/단체 주관 건축문화 행사에 대한 일반인의 인지도	63
그림 4-2 세계건축문화 행사 포스터 (서울, 바르셀로나, 싱가포르)	64
그림 4-3 어린이 건축교실 프로그램 사례	65
그림 4-4 해외 건축박물관 사례	67
그림 4-5 세움터 웹페이지	68
그림 4-6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68
그림 4-7 소규모 생활문화공간 사례	70
그림 4-8 젊은건축가상전시와 젊은건축가포럼 포스터	74
그림 4-9 서울디지털대장간 포스터와 실내	75

1. 서

1.1 건축문화

‘건축은 문화의 표현이다.’

프랑스 건축법은 ‘건축은 문화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문구로 시작된다. 건축을 아파트와 신도시개발과 같은 용어와 연결하는 데 익숙한 우리나라에서 낯설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이 문구에서 품격 있는 서구의 도시를 여행하며 부러움과 신기함으로 바라본 우리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중요한 방향을 짚어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간 가장 흔하게 사용하고 있었던 말이었던 ‘문화’와 ‘건축’을 그 근본부터 다시 생각하고 올바른 방향을 찾는 노력을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할 것이다.

최근 한류로 대표되는 우리의 문화역량은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인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대중음악, 드라마, 영화, 음식을 비롯하여 게임, 패션, 미용에 이르기까지 우리 문화의 자존심을 높이고 세계인과 함께 누리는 문화를 생산해 내고 있으며, 이러한 한류는 전자제품, 자동차 등의 산업적 경쟁력까지 견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것이다.

건축이 문화, 예술과 사회 전 분야를 통틀어 아우르는 중심역할을 하고 있음은 서구 사회에서는 기본적인 상식에 속한다. 서구인들은 음악, 미술과 문학에 대한 이해와 소양이 시민이 갖춰야 할 교양이 되듯, 건축에 대한 전문가에 준하는 이해와 깊은 관심 또한 문화시민의 당연한 기본 소양으로 여긴다.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오케스트라 지휘자를 사랑하고 존중하듯, 그 사회의 공공적, 사회적 가치를 건축과 도시 속에 실현해내어 아름다운 도시와 건축을 만들고 있는 전문가인 건축가를 소중하게 여기고 존경하는 사회분위기를 당연하게 여긴다.



그림 1-1 한류이미지



그림 1-2 스위스화폐
-건축가 르 코르뷔제



그림 1-3 유로화 통용 이전 핀란드
화폐 -건축가 알바 알토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건축은 주로 부동산과 경제적 가치의 대상으로 여겨져 왔다. 선진국에서 그랬듯 건설분야의 산업가치는 국가경제에서의 중요성이 점차 감소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이에 반하여 문화를 중심으로 사회경제적 가치를 높이며 전국민의 삶의 품질을 풍요롭게 만드는 복지정책이 새로운 국가경영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 확대되고 있다. 모든 국민의 일상의 삶과 밀착된 대표적인 문화의 분야는 건축문화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건축문화와 관련된 이제까지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였다. 수많은 건축행위가 벌어지고, 엄청난 문화시설이 지어졌으며, 올림픽, 월드컵, 엑스포 등 대규모 국제 이벤트를 통하여 우리사회 건축문화의 가능성과 성취를 드러낼 많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현재 우리의 건축문화는 어느 하나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지 못했다. 거의 모든 분야의 예술과 문화영역에서 대한민국의 놀라운 경제성장에 어울리는 성취가 있다고 느끼고 있는데, 왜 건축의 위상은 그렇지 못한 것일까, 우리의 사회 시스템을 어떻게 다시 구축해야 건축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절실한 순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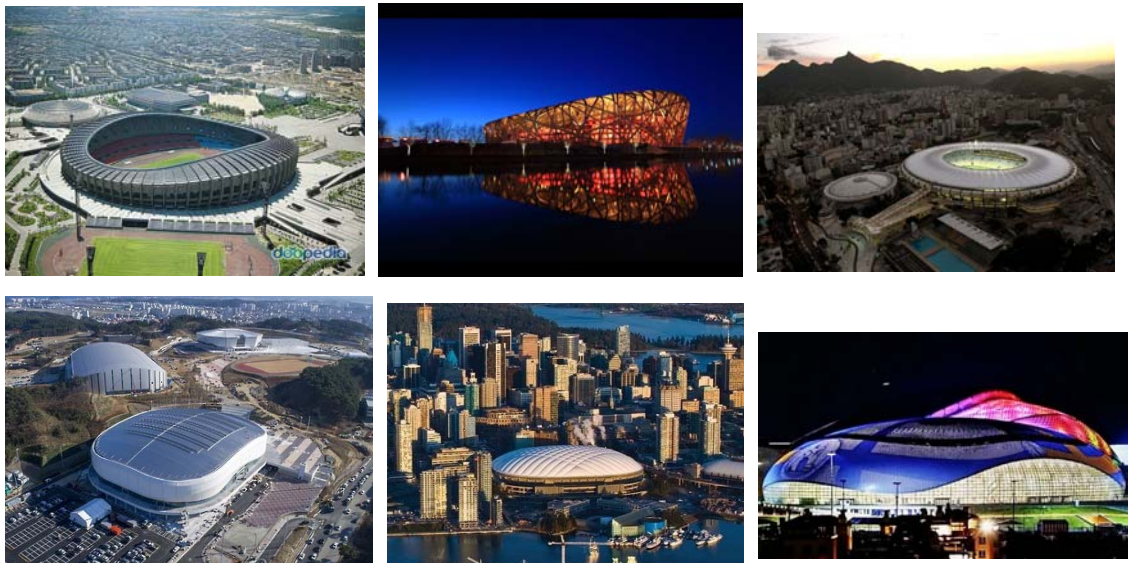


그림 1-4 세계 각국의 올림픽 경기장
 왼쪽 위부터 서울 올림픽 주경기장, 베이징 올림픽 주경기장, 리우 올림픽 주경기장
 평창올림픽 빙상경기장, 밴쿠버 동계올림픽 경기장, 소치 동계올림픽 경기장

1.2 건축문화와 건설

우리의 전통건축, 전통의 도시와 마을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충분한 예술적,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 전통을 바탕으로 현재의 도시와 건축이 진화되어 오늘날의 건축문화를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개척해 나갔다면 지금과는 판이하게 다

른 상황이 되었을 것이다. 일제침탈을 통한 우리 전통문화의 단절과 한국전쟁의 철저한 파괴와 압축성장, 경제중심의 사회건설은 우리 스스로 건축의 근본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건축을 도로와 교량과 같은 국토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는 토목중심 건설의 일부분으로 이해하고 다루어 왔던 상황이 이제까지 지속되고 있다. 최근까지 박물관, 문화예술회관, 공공청사와 같은 대표적 문화예술시설, 공공건축물들이 토목, 산업시설 분야에 적용되는 턴키방식으로 발주되며 건축문화와 예술정보다는 시설건립의 효율성에 대한 가치를 논하고 있어왔다. 소규모 문화, 예술 시설에 대하여도 디자인 역량과는 관계없는 실적과 요행 중심의 공공발주방식이 기획의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서슴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건축문화는 우리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던 건축, 건축물, 건설과 구분하여 정의되어야 하는 용어이다.

‘사람은 건축을 만들고, 건축은 다시 사람을 만든다.’¹⁾

이는 윈스턴 처칠의 건축에 대한 명언이다. 건축을 단순히 사람들이 짓고 사용하는 대상인 건축물로 이해되는 것을 넘어, 건축이 만들어낸 환경은 사람의 모든 것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건축의 세 가지 요소로 기능, 구조, 미를 꼽고 있으나, 이는 물리적 결과물인 건축물에 대한 관점을 대상으로 하는 건축에 대한 이해라 할 수 있다. 요즈음은 건축을 기술, 예술, 인문학이 결합된 인간이 만든 환경 전체를 다루고 있는 분야로 정의하며 건축 속의 인간과 문화가 강조되고 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 국민 행복추구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가 건축이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누려야 할 행복의 터전이자 실체이며 그 근본을 담아내는 것이 바로 건축이다. 또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삶의 터전을 올바르게 구축해 내야 하는 것이 건축분야에 맡겨진 임무이다.

우리의 건축문화가 당연히 자리해야 할 위치를 찾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그 시도는 건축기본법 제정을 통해 구체화 되었고, 국토해양부 건축관련 부서에서 건

1) We shape our buildings; thereafter they shape us. Winston Churchill
1943년 10월 파괴된 영국하원의사당 재건과정에서 기존 직사각형 평면과 말굽형 평면을 논의하며 영국 의회민주주의 근간인 양당체계에 어울리는 기존 평면을 유지함이 맞다는 주장을 하며 언급한 명언

축문화에 대한 정책시행으로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건축문화를 제대로 만들어내기 위한 기준이기 보다는 건물을 안전하게 짓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과 규제를 바탕으로 제정되어 운영해온 건축법의 틀 속에서 건축문화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일은 매우 더디고 어려워 성공을 기대하기 힘든 노력으로 보인다.

많은 건축문화 선진국과 같이 문화예술 중심의 부처에서 건축행정을 다룰 수 있도록 현재의 행정조직을 당장 바꿀 수 없다 하여도 지금의 체제 속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체부도 이제까지의 소극적인 건축문화와 관련된 정책의 기초를 바꿔야 한다. 문체부는 중요한 문화예술 관련시설의 건축을 주도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고 건설 중심의 기존체계에 위탁하여 관련 시설을 건설해 내는 것만으로 주어진 역할을 제한해 발휘하여 왔다. 음악에서 작곡자와 연주가가 미술에서 화가가, 문화에서 작가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문화예술의 콘텐츠를 다루는 문체부는 건축문화가 누구를 중심으로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이해와 관심, 실천이 매우 부족했다. 그 결과는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참혹하다고 할 만큼의 무미건조한 도시환경이며, 획일화 일색의, 자부심을 느끼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건축물들이다. 모든 국민은 행복한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다.

건축문화는 모든 국민의 ‘공간으로 누리는 행복’을 실현하는 수단이다.

건축을 ‘공간으로 누리는 행복’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 건축문화정책의 부재와 실패로 온 국민이 잘못된 건축과 도시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환경의 억압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1.3 건축문화예술 진흥정책

궁극적으로 문체부가 감당해야만 하는 건축문화의 발전에 대한 역할은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문체부가 건축문화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정책으로 구축하여 실천한다면 현재의 체계 속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낼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문체부의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인력과 시스템을 체계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체부는 이를 기반으로 장기적인 건축문화 관련 정책에 대한 개선된 법적, 행정적 체계에서 주도적으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 믿는다.

프랑스는 2015년 ‘건축국가전략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건축문화의 국제적 모범사례로 프랑스의 건축을 보고 있던 국내 건축 관계자에게는 프랑스가 스스로 프랑스 건축의 위기를 판단하고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그간의 노력이 매우 미흡하였음을 자인하며 프랑스 문화역량을 다시 건축에 집중하여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는 정책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었다. 보고서는 건축국가전략의 이름으로 6가지 전략과 30개의 필요한 조치들을 세분하여 제시하며 정책 실현을 위하여 구체적 노력과 명시된 기간 내의 실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건축문화가 민간의 개별적, 자발적인 노력만으로 성취되기 어렵다는 것을 웅변하여 보여주고 있으며, 국가의 전략으로 건축분야를 다뤄야 하고, 건축분야의 문화예술과 산업적 파급력이 얼마나 지대한가를 강조하여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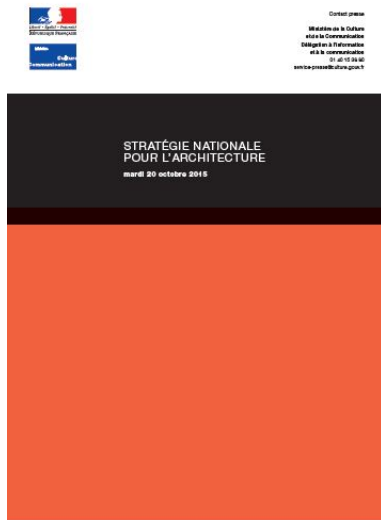


그림 1-5 프랑스 2015 국가건축전략 보고서 표지



그림 1-6 프랑스 2015 국가건축전략 싱크탱크보고서 표지

본 ‘건축문화예술 진흥정책 개발 연구’는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문체부의 정책 사업 방향 제시를 목표로 한다. 건축문화 발전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사업의 범위를 문체부로 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일부라도 만들기 위한 시작점으로는 의미가 있다. 해외 유수의 건축문화 선진국들은 건축문화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사회간접자본을 포함한 건설 분야와 주택 공급과 같은 사회복지 분야를 건축문화와 구분하여 행정체계를 구분하고 별도의 업무영역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국내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건축문화라는 개념이 자리 잡게 되는 초기 상태에서 이에 맞는 행정체계 구축과 업무영역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지만, 이는 국내 건축산업분야 전체의 의견 수렴이 이뤄져야 하며 관행에 대

한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국토부 역시 건축기본법 제정 이후 건축문화 발전을 위하여 건축기본법에 근거하여 일정 부분 역할을 해오고 있지만, 십여 년이 지난 지금도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을 볼 때, 국토부만의 노력 이상의 새로운 타개책이 필요해 보인다. 건축정책위원회를 비롯한 건축기본법에서 시작된 사업들이 대부분 국토부 내부 조직이나 사업으로 한정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토부 외부 조직에서 건축문화 사업에 관심을 갖고 일정 역할을 하는 것은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특히 문체부의 경우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건축을 문화예술의 한 부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문화 증진을 위한 역할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확보하고 있어서, 그 타당성은 충분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우리나라 건축문화 증진을 위한 전체적인 방향 제시보다는 그 이전의 초기단계로서 문체부가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들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추후 문체부를 넘어서 대한민국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전체적인 방향 제시와 구체적인 실천 전략, 정부 부처별 업역 정리 등의 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한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본 연구는 최근 발표한 국가의 건축문화예술 증진을 위한 전략계획으로서 프랑스 2015 국가건축전략보고서를 살피고, 국내의 문화예술시설 건립의 현황 점검을 통해 건축문화 발전을 위하여 문체부가 실천 가능한 실행사업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1.4 건축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지금까지 연구 현황

2005년 국내 건축문화 수준이 크게 열악하여 이를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건설 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를 발족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건축기본법 제정과 건축 도시연구소 설립 등 일정 부분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특히 건축을 문화예술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건축문화정책 수립을 위해 일정 역할을 담당하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연구 중 오늘날 국내 현황에 비추어 필요한 건축문화정책 사업의 전반을 다루면서 사업 및 조직 구성의 방향을 제시한 연구로 한국건축가협회에서 수행한 “국가 건축문화정책의 방향 제시 및 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이상진 외, 2007)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수행한 “건축문화 중장기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김효정 외, 2008)가 있다. “국가 건축문화정책의 방향 제시 및 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는 현재 건축문화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밝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건축문화정책의 방향과 5개 카테고리, 16개의 실행사업을 제안하였다. “건축문화 중장기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는 현재 국내 건축 사업 대부분을 국토교통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건축문화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국토환경 조성과 국민 복지를 위한 건설 부분 외에 건축문화 부분을 강화하여 국가 건축 사업에서 문체부가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 “국가 건축문화정책의 방향 제시 및 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2007년 당시 국내 현황을 바탕으로 제시된 건축문화정책의 방향과 실행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축문화정책의 방향은 아름다운 건축물 조성 자체가 아니라 도시의 장소성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 시설, 마스터플랜, 다양한 방면의 투자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 이를 위해서는 건축문화정책을 위한 다양한 관계자 (행정가, 공무원, 심의위원, 건축주, 시공사, 건축가, 도시설계가, 예술가 등)들이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루고, 건축물뿐만 아니라 공공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가 함께 어우러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지금까지 국내 건축문화 발전을 저해한 주요한 원인으로 건설과 도시개발이 주도한 건축정책, 규제 위주의 건축법 제도, 건축정책 입안자의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들었으며,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선진화된 건축문화 조성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로 다음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 법적책임자 이상의 건축가의 역할과 책무 강화, 이를 위한 건축가의 위상 제

고 필요

- 건축가 선정방식 개선 필요
- 건축가의 저작권 개선 필요
- 설계보수비 산정방식 개선 필요
- 규제 위주의 현행 법제도
- 수도권과 지역 간 설계인력의 불균형
- 건축교육과 홍보, 전문 교육 외에 일반 국민에 대한 홍보, 교육 약화
- 앞으로 국내건축문화 발전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목표 및 추진항목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기존 문화예술 관련법과 제도를 건축문화정책 분야로 확대하여 건축의 문화적 가치가 존중되는 법/제도적 환경 조성
 - 기존 법체계 안에서 건축문화정책 주체로서의 문체부 위상 확립 추진
 - 공공건축물 설계 질 쇄신을 우선과제로 추진
 - 건축분야 관련주체들의 자율적 노력 진작을 위한 좋은 건축 파급/확산 지향
 - 일반 대중의 건축문화의식 고양
 -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연구·자료 기반 구축
 - 건축문화정책 수행역량 강화, 건축문화정책 전담 기구 설립
 - 문체부 직접 관장 예산/법제도에 연계한 건축문화진흥사업 추진

표 1-1 “국가 건축문화정책의 방향 제시 및 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추진 항목

분류	추진항목
건축문화정책 수행역량 강화	건축문화진흥재단 설립 및 관련사업 추진
	문화예술진흥법-문화예술위원회에서 건축분야 강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상 문화산업에 건축설계 관련 사업 포함
공공건축물 설계 질 혁신 우선과제로 추진	공공건축물 설계를 설계경기에 의해 발주하는 원칙 확립
	공공건축물 설계에 다양한 발주방식 도입이 가능한 법적 근거 확보
문화관광부 소관 건축물 설계발주방식 쇄신	직접발주 건축물 설계발주과정을 건축문화사업으로 추진
	지원하는 지자체 건축물/시설에 대한 설계발주과정 관리
	문화관광부 지정건축가 제도 운영
	소관 건축물 설계업무를 총괄하는 문화시설 건축 커미셔너 제도 운영
	지자체 및 공공기관 건축설계관리 지원
소관 법제도에 연계한 건축문화진흥사업 추진	건축물의 미술장식을 공간환경 디자인으로 확대 재편
	근현대 주요 건축물 문화재 지정제도 시행
건축문화 기반 구축과 대국민 홍보 교육	건축 아카이브 구축사업 지원
	기존 건축단체들 주관 행사들을 문광부 지원사업으로 체계화
	건축 시상제도 내실화/신뢰도 강화
	건축문화 대중화를 위한 교육, 홍보사업 내실화 및 강화

□ 건축문화 중장기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건축과 관련하여 현재 주요 부처별 업무 현황을 분석하고, 이탈리아와 프랑스 사례를 분석하여 추진해야 할 주요 사업과 이를 위한 추진 체계 재정립을 제시하였다.

-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문화재청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현황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표 1-2 부처별 업무 현황

(출처: 건축문화 중장기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부처	담당부서	업무내용	비고
국토해양부	도시재생과, 건축기획과 건축문화팀, 기술기준과	건축정책총괄, 도시경관, 도시디자인정책, 건축관련법 및 기준, 건축사관리 및 건축행정, 건축디자인진흥, 건축문화축제기획, 건축설계기준·표준화·평가 등	건축정책총괄 -기술·공급자적 측면에서 정책수립 -건축문화기본법제정으 로 건축문화진흥정책 수 립 중
문화체육관광부	디자인 공간문화과	문화적 공간환경 조성 정책 수립, 공공디 자인정책 등	문화적 공간환경 조성
지식경제부	디자인브랜드과	디자인브랜드발굴·육성 정책	디자인산업·브랜드화 중심
문화재청	건축문화재과 등록문화재과	건조물문화재보존·관리, 근대건축·시설물 보호·관리	건축문화유산 보존·관리 정책 전반

- 이탈리아와 프랑스 사례 분석을 통해, 국가의 건축 사업을 건축건설과 건축 문화로 구분하고 이를 위한 정부 조직 편성 사례를 제시.
 - 프랑스의 경우 건축건설정책을 총괄하고 도시계획 및 주거 공급을 담당하는 주거도시부와 건축문화정책을 총괄하는 문화통신부로 구분
 - 이탈리아의 경우 역시 사회기반교통부와 문화예술활동부로 구분
- 국내의 경우에도 건설기술과 건축물의 생산과 공급을 다루는 분야와 구별하 여 문체부에서 건축의 문화예술 측면을 다루는 문화유산 보존 관리, 건축디 자인 진흥, 한국건축의 정체성 확립과 국제적 홍보, 건축분야 전문 인력 육 성 지원, 건축자료 수집 및 전시, 국민교육 홍보 등의 분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
- 이를 위하여 건설기술 부문과 건축문체부문으로 구분하여 국토부와 문체부 가 각각 전담하는 방향으로 추진 조직을 정비하고, 부처별 건축 관련 업무 재설정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

표 1-3 부처별 건축문화정책 업무 재설정 방향
(출처: 건축문화 중장기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부처	업무내용
국토해양부	건축표준화제도, 건축기준통합운영, 도시경관 및 도시디자인 기준 및 지침, 건축설계기준제정 및 설계표준화, 건축사 및 건축 관련 단체 지원 등 건축 및 건축 디자인 지침 및 기술 진흥을 위한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시설물 및 건축디자인 진흥, 건축디자인 저작권 보호 국공립 시설의 문화공간 기획, 우수 건축 및 건축가 발굴, 지역건축가(젊은 건축가) 발굴 지원, 건축문화축제 지원, 건축문화교육, 국제건축교류 및 건축행사지원, 건축자료 수집·관리, 한국건축 홍보·출판 등 한국건축문화구축 및 한국건축의 정체성 확보, 건축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측면에서 정책 추진
문화재청	건축문화재 보존·관리·수리·정비 기준 제정, 근대건축물 등록 및 보존관리, 활용에 관한 사항 등 근대건축물을 포함한 건축문화유산 전반에 대한 보존·복원·관리에 필요한 기술·인력·활용에 관한 정책 추진
국가기록원	건축도면 등의 보존·복원 등에 관한 사항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설정

위의 두 연구는 건축문화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고, 건축기본법이 도입되던 시점에 국내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주요 정책 사업들과 이를 위한 추진 체계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또한 이 제안들은 7-8여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에 따라 설계공모 확대 등 약간의 성과를 보이긴 했으나 아직까지 대다수의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건축문화에 대한 관심이 다소 높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국내 여건은 크게 변화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들을 제시하기보다는 기존 제시되었던 추진 항목 및 체계들이 지향하던 목표를 유지하면서 현재 국내 현황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들을 조정하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일차적으로 연구의 범위를 문체부에서 추진가능한 영역으로 한정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문체부를 넘어 정부 부처간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2. 국내 건축문화 현황과 개선 방향

2.1 건축기본법 활성화 방안 필요

2.1.1 건축기본법의 의의

1) 건축에 대한 정의 확대

- 건축기본법은 건축이라는 용어를 건축물뿐만 아니라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포함하여 조성하는 행위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 독립적인 건물 하나는 건축물로 별도로 정의
 - 건축디자인을 단순히 건축물을 세워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함께 만드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여기서 공간환경은 공간구조와 공공공간, 경관 등을 통칭하는 표현으로 사용

(건축기본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공간환경(空間環境)"이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공공공간 및 경관을 말한다.
3. "공공공간(公共空間)"이란 가로·공원·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公衆)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건축디자인"이란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조성으로 건축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설계하고 개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5. "품격"이란 주변환경과의 관계, 규모, 형태, 구조, 재료, 시공수준 등을 통하여 그 목적과 지역의 정체성을 창출할 수 있는 적절성을 말한다.
6. "품질"이란 안전, 보건, 기능, 쾌적, 자원절약과 재활용 등의 객관적 성능을 말한다.
7. "건축"이란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건축문화에 대한 기본 개념 제시

- 건축기본법은 법적으로 건축문화에 대한 개념 제시하며 건축문화 실천을 위한 제도적 근거들을 마련하였다.
 - 1조 목적에서 건축문화 진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제시

(건축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정하고 건축정책의 수립·시행 등을 규정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공동의 노력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국민의 안전·건강 및 복지에 직접 관련된 생활공간의 조성
2.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조정하고 수용하며 경제활동의 토대가 되는 공간환경의 조성
3. 지역의 고유한 생활양식과 역사를 반영하고 미래세대에 계승될 문화공간의 창조 및 조성

- 이는 건축에 관련된 가장 기본이라 볼 수 있는 건축법과 비교할 수 있는데,

건축법은 허가와 관리를 통해 최소한의 공공기준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 1조 목적에서 기준과 용도 규정을 통한 공공복리 증진 제시

(현 건축법 제1조)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

(1962년 최초 건축법 제1조) 본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의 기준 및 용도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건축문화 증진을 위한 실행수단 제시

- 건축기본법은 품격이 있는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건축정책 수립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 건축정책기본계획은 법 11조에 따라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데, 여기에는 건축문화기반 구축 등 건축문화 진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1. 건축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건축의 품격 및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4.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대책
 6. 우수한 설계기법 및 첨단건축물 등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7. 건축분야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건축디자인 등 건축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9. 건축문화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10. 건축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 및 선도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 건축기본법은 법 20조, 21조, 22조에 따라 건축문화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건축디자인기준, 시범사업 실행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추진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문화체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서간 협력을 하도록 하고 있다.

제20조(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건축문화 관련 시설의 설립 및 운영
2. 출판·전시·축제 등 건축문화 관련 사업
3. 국민의 건축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4. 건축 관련 해외 진출 및 국제교류
5. 제21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6. 제22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7. 그 밖에 건축문화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1조(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축디자인(공공공간을 제외한다)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공공간의 건축디자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건축기본법은 법 13조에서 19조에 걸쳐 건축정책 심의 및 수립을 위한 정부 조직으로 건축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 단위에서 광역건축위원회 (시, 도)와 시, 군 구 건축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법 14조에 따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건축정책기본계획을 포함한 건축정책 수립 및 조정
 건축분야 발전에 관한 주요 사업 지원
 건축 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건축문화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국민의 건축문화 향유 기회의 확대에 관한 사항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건축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2.1.2 건축기본법 제정 이후 나타난 성과

- 건축기본법에서 제시된 실행수단을 근거로 현재까지 나타난 성과들을 국토교통부 산하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표 2-1 건축기본법 실행수단에 따른 성과와 의미
 (출처: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성과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연구, AURI, 2015)

건축기본법 실행수단	1차 성과	2차성과	3차성과
기본계획수립 (제10-1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 16개 광역시도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 관련 법령 제정 근거 마련 - 건축정책 지원기구 설립 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도시재생특별법, 건축자산진흥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 - 공공건축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기구, 국가한옥센터 설립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구성 (제10-1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구성 운영 (1기-4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정책 심의조정 기능 - 건축정책에 대한 사안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창구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정책을 단일부처 업무가 아닌 범부처 업무로 정책범위 확대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제2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진흥원 설립 근거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문화 행사, 교육, 신진건축가 육성, 전문인력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건축기금 조성 근거
건축디자인 기준 설정 (제2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건축기획업무, 사전검토제도 운영기준 마련 - 건축디자인시범사업, 도시재생활력사업 등 시범사업 운영 기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민간전문가 활용확대 - 건축발주제도, 사후관리제도개선 등 건축품질향상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제 2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 신진건축가 육성 지원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사업을 통한 지역 건축 및 도시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 과정에 참여한 전문가 역량 향상

1) 건축정책계획 수립

- 이른바 건축선진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해외 국가, 도시들은 일찍부터 건축정책과 건축 및 도시 사업 계획을 수립, 추진해오고 있다.
 - 1991년 네덜란드가 국가차원에서 최초로 건축정책을 수립한 이후 핀란드, 프랑스, 영국 등 16개 국가가 건축정책을 위한 법령 제정 또는 수립 중
 - 도시 차원에서는 런던의 "The London Plan", 코펜하겐의 "Copenhagen City of Architecture", 뉴욕의 "OneNYC: The Plan for a Strong and Just City" 등이 해당
- 국내에서도 건축기본법에 근거하여 국가건축정책계획으로서 2010년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수립, 2016년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을 확정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건축기본계획으로 2015년 기준 서울시를 포함하여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진행 중이다.
 - 서울시 (2011년 1차, 2016년 2차 준비 중), 경기도, 인천, 대전, 부산, 충청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수립 완료
 -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수립 중

가. 제1차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

- 제1차 국가건축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아름다운 국토, 쾌적한 삶터”를 비전으로 하며, 생활공간의 품격 향상, 건축산업 선진화, 건축자산 개발과 국민의 건축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3개 목표, 6개 전략 및 18개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 제1차 18개 실천과제 아래에 총 113개의 단위실천과제를 제시했으며, 2차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에 따르면 이 중 92개의 단위 실천과제를 수행 완료했거나 진행 중으로 평가하고 있다.
-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이 국토교통부 단일 부서 사업으로 총 113개의 단위실천과제 중 타부처 협업 과제는 18개 (협조부처 사업은 제외)에 불과하여, 부서간 협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건축정책 추진을 위한 다양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법에서 제시된 추가 계획 및 사업 추진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센터 등의 설립도 설립 이후 운영에 어느 정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으로 현상공모 확대 등 발주제도 개선은 이루어졌으나 법에서 제시한 건축서비스산업진흥계획 수립, 진흥원 설립 등은 추가계획 미비

- 건축박물관은 설립 예정이긴 하나 정확한 진행계획 미정이며, 아카이브 등 핵심 기능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음.
- 공공건축지원센터의 경우 일반 건축물의 기획 및 발주 체계 외에 전문적인 건축물의 기획에는 한계가 있음.

표 2-2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 목표, 전략, 사업 내용 및 성과

목표	전략	실천과제	주요 성과 ²⁾
1. 품격 있는 생활공간 조성	1. 국토환경 디자인향상	1. 지역 및 도시경관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13) - 경관법 개정(2013)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13) - 특별건축구역에 이어 특별가로구역 제도 도입(2013) -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 (28개, 162억원 지원) - 민간전문가 지원 시범사업(거창, 안동, 완주 지원) - 해피하우스 (서울, 전주, 대구 지원) - 도시재생선도지역 (200억원 지원)
		2. SOC 국가기간시설 디자인 제고	
		3. 공공부문 디자인 향상을 위한 기반 강화	
	2. 건축 도시 환경 개선	1. 공공건축 디자인 쇄신	
		2. 민관이 협력하여 도심 재창조	
2. 건축 도시분야 녹색성장 기반 구축	3. 녹색건축 도시 구현	1. 탄소저감형 도시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2012)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2013) -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 그린홈 보급자리주택 공급 - 저탄소녹색시범도시 선도사업(거창, 포천, 강릉)
		2.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제고	
		3. 친환경 주택건설 공급 활성화	
		4. 녹색건축 선도사업 추진	
	4. 건축 도시 산업의 고도화	1. 건축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2. 미래 기술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3. 건축 도시 핵심기술과 설계기법 개발	
3. 창조적 건축문화 실현	5. 고유한 건축문화 창달	1. 고유한 건축문화유산의 보전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14) - 건축협정제도 도입 (2013) - 건축협정시범사업 추진 (2015) - 국가한옥센터 설립 - 신한옥플랜 수립 및 한옥 R&D 추진 - 공공건축상, 신진건축사상 등 시상제도 운영 - 지역별 대표거리 조성사업 추진
		2. 지역 건축자산을 재활용한 건축문화 창조	
		3. 지역별 대표거리(브랜드거리) 조성사업 추진	
	6. 건축문화의 세계화 촉진	1. 국민과 함께하는 건축문화 실현	
		2. 건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	
		3. 건축문화 역량강화를 위한 토대 구축	

2) 성과 부분의 출처는 제2차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 공청회 자료집(2016년 5월) 참조

표 2-3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사업 중 국토교통부 외 타부서 주관 사업

전략	실천 과제	세부과제	사업단위	주관부처
1. 국토환경 디자인 향상	1.1 지역 및 도시경관 향상	자연과 조화되는 농어촌 지역경관 향상	농어촌지역 유형별 경관계획 수립 시행	농식품부 지역개발과
			농어촌 경관개선 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농어촌 경관을 고려한 주거모델 개발 보급	농식품부, 국토부
2. 건축도시 환경 개선	2.1 공공건축 디자인 쇄신	공공건축물 디자인 품질 개선과 강화	공공건축물 디자인 개선사업 추진	교과부, 문체부, 보가부, 행안부
			학교시설 디자인 강화	교과부
3. 녹색 건축 도시 구현	3.3 친환경 주택 건설 공급 활성화	에너지 소비 관리를 위한 에너지 소비량 공개	에너지 소비량 인터넷 공개방안 마련	지경부, 국토부
			일정규모 주택의 에너지 소비 측정, 검증 확대	
	3.4 녹색건축 선도사업 추진	미래형 스마트 그린씨티 시범단지 조성	미래형 스마트 그린씨티 시범단지 조성	지경부, 국토부
		에너지 절약형 저탄소 녹색학교 건축	에너지 절약형 녹색학교 건축방안 마련	교과부, 지경부, 국토부
			친환경 에너지 절약 체감형 녹색학교로 개선 추진	
		탄소제로 건축시범사업 추진	친환경신기술을 적용한 탄소제로 건축 테스트베드 사업 추진	지경부, 국토부
4. 건축 도시산업 고도화	4.2 미래 기술관형 변화에 선제적 대응	성능중심으로 건축 조경기준의 혁신적 전환 추진	건축 및 조경관련 내진기준 안전대책 강화	소방방재청
			건축 및 조경관련 방재기준 강화	
5. 고유한 건축문화 창달	5.1 고유한 건축문화유산의 보전 활용	농어촌 한옥마을 조성 추진	농어촌 지역개발과 연계하여 기존 한옥 보전 및 신규 한옥 신축을 통한 한옥마을 조성	국토부, 농식품부
	5.2 지역 건축자산을 재 활용한 건축문화 창조	근대 산업유산을 활용한 지역특화문화공간 조성	근대산업유산 및 유희시설을 재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문체부
		지역 유희 건축자산을 활용하는 새로운 개발모델 마련 시행	구 서울역사의 원형복원 및 문화공간 조성 추진	문체부
			폐교나 농어촌 유희시설을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문체부
6. 건축문화 세계화 촉진	6.1 국민과 함께하는 건축문화 실현	우수 건축물과 도시환경에 대한 홍보 강화	책자,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국내외 홍보	국토부, 문체부

나. 제1차 서울시 건축기본계획

- 제1차 서울시 건축기본계획은 “시민이 행복한 도시, 세계가 사랑하는 서울 건축문화”를 비전으로 3개 목표, 6개 전략, 14개 실천 과제를 제시하였다.
- 14개 실천과제 분야 중 2개 분야를 제외하고 12개 사업 분야 진행되었으며, 이 중 진행되지 않은 2개 분야는 초고층 건축물 분야와 탄소저감형 녹색도시 조성 분야이다.
-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과 비교할 때, 14개의 실천과제 중 5개 사업이 타 부처 사업으로 타부처 사업 비율이 다소 높지만, 여전히 주택본부 사업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또한 5개 사업 중 3개 사업이 주택본부와 협력사업이다.
- 진행상황에서 볼 때, 주택본부 단독 사업에 비해 타부처 사업의 진행이 잘 되지 않은 편으로, 실천에 있어서 부서간 협력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2-4 제1차 서울시 건축기본계획 목표, 전략, 사업 내용 및 성과

목표	전략	실천과제	세부과제	성과 ³⁾
1. 활기찬 문화도시 서울	1. 건축문화 지역특성화	1. 장소형 콘텐츠 발굴 및 활용	1. 건축 도시 문화장소 목록화 작업 2. 장소형 콘텐츠 활성화 공모지원 사업 3. 건축도시문화포털 운영	건축가이드북 및 모바일웹 제작
		2. 한옥의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	1. 한옥 보전 및 보급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2. 보전과 진흥의 대상이 되는 한옥 판단기준 마련 3. 서울의 한옥 및 한옥주거지에 대한 전수조사 4. 서울형 한옥모델 개발 보급	관련 조례 제정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 중
		3. 근대 건축문화자산의 보전 및 활용	1. 근대건축문화자산 선정 기준 마련 2. 근대건축문화자산 기록화 체계 구축 3. 근대건축문화자산 보전 및 활용계획 마련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중
		4. 초고층 건축물 건립방향	1. 초고층 건축물 입지 기준 마련 2.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마련 3. 초고층 건축물 행정절차 효율화 방안 마련	검토 중
	2. 건축문화 기반 구축	5. 건축문화 전담기관 설립 및 교육 홍보 강화	1. 건축문화책자 및 탐방로 공모지원 사업 2. 건축트리엔날레 3. 건축재단 및 건축도시박물관 설립 운영	서울건축가이드북 및 문화지도제작 서울건축도시비엔날레 서울건축박물관 설립 진행 중
		6. 우수건축인 발굴육성 지원	1. 서울형 공공건축가제도 도입 2. 서울특별시 건축상 위상 강화 3. 신진건축인 시범사업 추진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 서울형 공공주택 아이디어 설계 공모전
2. 지속가능한 푸른도시 서울	3. 녹색 건축 도시 환경 기반 구축	7. 탄소저감형 녹색도시 조성	1. 건축물 입지부문 기후변화 취약성 지도작성 2. 자연 에너지 활용 건축물 입지 및 배치 시스템 구축 3. 건축물 물순환 시스템 구축 활성화	검토중

3. 균형있는 입체도시 서울	4. 지속가능한 건축물 관리	8. 건축물 에너지 관리체계	1. 건축물 제로에너지 실현을 위한 전략 수립 2. 건축물 에너지 성능진단 매뉴얼 및 프로그램 개발 3. 건축물 신재생 에너지 사용 의무화 추진 공공건축물 대상 탄소배출제로 건축시범사업 실시	제로에너지 R&D 시범사업 추진 에너지 소비량 계량화 진단 프로그램 개발
		9. 건축물 생애관리	1. 에너지 효율 및 유지관리 성능 향상을 위한 설계 체크리스트 마련 2.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점검 매뉴얼 마련 3. 건축물 생애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녹색성장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 에너지 소비총량 예측 프로그램 보완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구축
		10. 건축물 리모델링 활성화	1. 서울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 2. 서울시 녹색 리모델링 제도 구축 3. 신축시 리모델링을 고려한 설계 의무화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 등 진행 중
	5. 건축 도시 디자인 관리체계 업그레이드	11. 건축 도시 관리 수단 선진화	1. 주민주도형 협정제도 표준 매뉴얼 마련 2. 각 구역별 연접 전면공지 종합계획 마련 3. 입체복합 건축공간 매개공간 마련	주민주도형 건축협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표준규약, 건축협정설계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공개공지 종합계획 마련 광역환승센터 건립 추진
		12. 공공건축물 기획 발주체계 개편	1. 다양한 현상설계경기공모발주방식 도입 2. 공공건축물 설계과정 평가지표 운용	공공건축물 발주제도 개선방안 지침 주요 현상설계 당선작과 연계공간개선 시범사업 기획
	6.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 조성	13. 주거환경지 수 개발 및 적용	1. 주거환경지수 개발 2. 지수가 낮은 지역에 대한 단계별 발전 프로그램 마련 3. 주거환경지수를 활용한 주거환경기준 마련	진행중
		14. 살기좋은 동네 만들기	1. 주거지 담당 건축 전문가 선정 2. 저층 주거지 옥상녹화 유도 및 지원 3. 저층 주거지 개선을 위한 표준화된 시설 기준 및 사후 관리 매뉴얼 작성	아파트 코디네이터 운영, 공동체 활성화 플랫폼 구축

표 2-5 제1차 서울시 기본계획 과제 중 주택본부 외 타부서 사업

목표	전략	실천과제	주관부처
1. 활기찬 문화도시 서울	1. 건축문화 지역 특성화	1. 장소형 콘텐츠 발굴 및 활용	문화관광디자인본부
		4. 초고층 건축물 건립 방향	도시계획국
2. 지속가능한 푸른도시 서울	3. 녹색 건축도시 환경 기반 구축	7. 탄소저감형 녹색도시 조성	주택본부, 맑은환경본부
3. 균형 있는 입체도시 서울	6.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 조 성	14. 주거환경지수 개발 및 적용	주택본부, 도시계획국, 주 택정책개발반
		15. 살기좋은 동네 만들기	주택본부, 도시계획국

3) 성과 부분의 출처는 제2차 서울시 건축기본계획 공청회 자료집(2016년 7월) 참조

2) 건축정책위원회 구성

-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건축정책에 대한 전반을 책임지는 역할을 담당하며, 서울시 역시 서울시 건축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서울시 차원에서 건축정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기본법에 근거하여 대통령 소속 직속 위원회로 출범하여 2008년 12월 출범, 현재 4기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 1기('08.12 ~ '10.11) / 2기('11.04 ~ '13.04) / 3기('13.12 ~ '15.12) / 4기 ('16.02-)
 - 위원장 포함 위촉직 민간위원 20명, 10개 부처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장관 당연직 위원 10명, 총 30명으로 구성
 - 출범 당시 조직은 위원장과 3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
- 행정조직으로는 건축정책위원회를 담당하는 기획단이 설립되었으나 점차 위상이 약화되고 있으며, 활동 범위가 국토부 내부로 한정되고 있으며, 다양한 부처별 사업 조율이 어려워지고 있다.
 - 당시 기획단장은 대통령비서관이 겸직하였으나 현재 국토부 국장(건축정책관)이 담당
 - 각 행정부처 파견직(별도정원)을 없애고 1개 과로 축소
 - 현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산하 부서는 3개 과로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업무의 범위가 제한적임.

표 2-6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산하 부서 및 주요 업무 내용

부서	주요 업무 내용
건축정책과	건축정책위원회 업무, 건축법 운영 및 개정, 규제 정비 건축제도개발관련, 건축물 안전 관리 등
녹색건축과	녹색건축 제도 정책, 건축행정 정보화 사업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인증제도, 그린리모델링, 제로에너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BIM 등
건축문화경관과	건축사 법 및 자격 관리 경관법 및 경관 정책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설계 공모 등) 건축문화진흥행사 운영

나. 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와 총괄건축가, 도시공간개선단

- 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기본법과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를 근거로 서울시 건축정책 심의, 관련 부서 간의 조정 및 권고를 목적으로 2010년 설립되었다.
 - 서울시 건축기본조례에 의한 주요 활동 내용
건축정책의 심의 및 자문, 기획 연구
도시 및 건축의 주요 정책 수립 검토 및 제도화
건축학교 운영,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지정, 건축포럼 운영 등 건축문화 진흥 활용
건축행정 개선, 관련 부서 간 건축정책의 조정 및 권고
공공건축 발주 자문, 공공건축가 운영 등 공공건축 품질 개선을 위한 자문 및 기획 활동 포함
- 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시 총괄건축가가 담당하며, 행정은 도시공간개선단이 담당하고 있다.
 - 총 25명으로 구성 (총괄건축가 1, 민간전문가 15, 시의원 2, 공무원 7-기획조정실장, 문화본부장, 안전총괄본부장, 도시재생본부장, 도시계획국장, 주택건축국장, 푸른도시국장)
 - 도시공간개선단은 서울시 행정2부시장 직속으로 행정2부에는 도시계획국, 도시재생본부, 주택건축국, 푸른도시국 등 공간환경을 다루는 다수 부서들이 포함
- 서울시 총괄건축가는 2014년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를 근거로 도입되었으며, 서울시 총괄건축가는 서울시 건축 및 공간환경 조성과 관련된 주요 자문 및 총괄 조정 역할을 담당한다. (건축기본조례 제 36조)
 - 서울시 건축기본조례에 나타난 주요 업무 범위
시 건축 및 도시·디자인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자문
시장 등이 발주하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 사업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자문
시장 등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임대주택건설사업 등의 기획 및 기본설계 자문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공시설 이전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자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및 사업시행에 대한 사전 자문
공공건축 관련 전문가들과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다. 국가 건축정책위원회 및 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 비교

- 국가 건축정책위원회의 경우 부처간 연계를 통하여 국토의 공간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사업 실행을 목적으로 했지만, 담당 행정부서인 기획단의 축소에 따라 업무 영역이 국토부로 한정되었다면, 서울시의 경우 총괄건축가 제도 및 도시공간개선단 도입에 따라 현재 정책 수립 및 전략 사업 실행에 있어서 일정 부분 효과를 보고 있다.

- 서울시의 경우 총괄건축가 제도와 도시공간개선단을 도입하기 전, 서울시 정책위원회가 건축기획과 소속이었을 당시 국가 건축정책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부서간 협력 체계 구축이 크게 어려웠으며, 이는 민간전문가 중심의 정책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역량 있는 전문가 섭외 이상으로 행정조직과의 연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2.1.3 건축기본법의 한계

1) 건축문화에 대한 물리적 접근 강조

- 공간환경에 대한 정의가 물리적 환경 중심으로 정의되고 있다. 개별 건물이나, 이들이 이루는 공간구조, 공공공간, 경관으로 확대하여 다루고 있으나, 여전히 건축물들이 만들어내는 물리적 결과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물리적 결과물의 품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정책 및 디자인 기준, 시범사업 정의
 - 건축 역시 이러한 물리적 환경을 만들어내는 행위로 정의
- 건축이 문화예술의 일부로서 가져야할 가치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 건축기본법에서 건축의 중요한 정책 목표는 공공성 구현에 있으며, 이를 생활공간적 공공성, 사회적 공공성, 문화적 공공성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문화예술로서의 가치 부분은 부족하다.
 - 생활공간적 공공성의 경우 안전과 노약자 배려, 사회적 공공성은 사회 경제적 자산으로서 건축의 가치 확보, 문화적 공공성은 조성과정에서 전문가와 주민, 기존 여건에 대한 존중과 참여를 의미

<p>제7조(건축의 생활공간적 공공성 구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고 그 안전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계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사용자의 건강과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의 이용을 배려하여 조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제8조(건축의 사회적 공공성 확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다원적(多元的) 문화에 부응하고 미래사회의 문화적 요구변화와 기술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건축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이 미래세대에 계승되는 사회·경제적 자산으로서 조성되고, 그 가치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p> <p>③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조성하고 사용하는 과정 등에 있어서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재이용과 재생을 촉진함으로써 자연과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p> <p>제9조(건축의 문화적 공공성 실현) ①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조성하여 사용하는 전 과정에서 건축의 문화적 가치가 향상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문화적·산업적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창의성이 존중되어야 한다.</p> <p>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이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풍토나 역사 또는 환경에 적합하게 조성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유산(건축유산)을 보전하고, 새로운 건축물 및 공간환경이 기존의 공간</p>
--

환경과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조성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시행한 건축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책성과를 평가하는 등 건축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실행수단들의 현실화 방안 부족

- 건축기본법 및 건축기본계획 자체로 볼 때, 국내 건축문화 개념은 이미 도입되었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실행 수단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건축기본계획 및 서울시 건축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내용은 이후 해외 국가건축정책 내용들에 비추어 볼 때, 필요한 사업들을 망라하고 있다.
- 그러나 제시된 사업들의 실행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실행력이 부족하다.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사업들의 내용은 좋으나 사업의 범위가 광범위한 경우가 많아서 관련 법제 개선, 가이드라인 작성 등의 사업 추진은 원활하나 실행 사업으로 연결이 잘 되지 않고 있다.
 -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를 추진할 행정체계 (행정부서)와의 연계성 부족
 - 기본계획을 담당한 건축정책위원회를 지원하는 행정 부서 역시 전체 행정조직 내의 일부로 담당 부서의 업무 범위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움
- 건축기본법 및 건축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방향성을 유지하되, 실행 사업에 있어서 각 행정부서별 사업 추진 체계를 고려한 세심한 사업 방향 접근이 요구된다.

2.2 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 개선 필요

2.2.1 문화 관련법에서 건축에 대한 이해 부족

1) 기능적인 시설로서 건축 접근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서는 건축을 문화예술의 한 부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 경우, 문화산업 관련 정의에서 건축에 대한 내용은 제외되어 있으며, 대신 문화산업진흥시설이나 문화산업단지 등 문화산업에 대한 활동을 담는 건축물로만 접근하고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물을 말한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

18. "문화산업단지"란 기업·대학·연구소·개인 등이 공동으로 문화산업과 관련한 연구개발·기술훈련·정보교류·공동제작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토지·건물·시설의 집합체로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정·개발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19. "문화산업진흥지구"란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집적화를 통한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의 영업활동·연구개발·인력양성·공동제작 등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제28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르면 “시설”은 문화예술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어서, 시설 자체의 문화적 가치는 고려되지 못하고 기능적인 측면이 강조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문화 보급, 문화 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도서관법, 공연법 등에서도 관련 시설은 해당 활동을 담는 건축물로만 인식되고 있으며, 각 시설에 대한 기능적인 접근 외에는 시설 자체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조치에 대한 사항은 전혀 없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경우 박물관 미술관 설립 및 문화시설로 인정받기 위한 등록 및 변경 조건 중 시설 조건으로 시설명세서만 요구
 - 시설명세서는 건축물의 실 목록 및 면적 기준만 포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등록 신청서 등)

①영 제8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르고, 등록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명세서 : 별지 제7호서식
2.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 별지 제8호서식
3. 학예사 명단 : 별지 제9호서식
4.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 :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div style="text-align: center;"> <input type="checkbox"/>박물관 시설명세서 <input type="checkbox"/>미술관 </div>			
1. 명 칭			
2. 종 류	<input type="checkbox"/> 1종 <input type="checkbox"/> 2종	3. 유 형	
4. 부 지 면 적	m'		
5. 전 시 실	실 m'		
6. 수 장 고	실 m'		
7. 작업실·준비실	실 m'		
8. 사무실·연구실	실 m'		
9. 자료실·도서실	실 m'		
10. 시청각실·강당	실 m'		
11. 화개방지사설			
12. 도난방지시설			
13. 온습도조절장치			
14. 사육·수용시설	실 m'		
15. 진료·검역시설	실 m'		
16. 사료장고	실 m'		
17. 오물·오수처리시설			
18. 축종실	실 m'		
19. 묘포장	실 m'		
20. 식물병리시설	실 m'		
21. 비료저장시설	실 m'		
22. 수확처리시설	실 m'		
23. 순환장치			
24. 예비수조			
25. 기타시설			

작성요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란의 시설 중 해당되는 시설만 쓰십시오.

210mm×297mm(일반용지 80g/m²(계활용품))

- 공연법의 경우 공연장 건립과 관련하여 안전 관리 외에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른 무대 및 방음 등 기능에 근거한 시설기준만 존재

공연법 시행규칙 제5조(공연장의 시설기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은 무대시설(조명시설·음향시설을 포함한다) 및 방음 시설로 한다. 다만, 객석의 천장이 없는 공연장의 경우에는 방음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도서관법의 경우 역시 사용이라는 시설 측면에서만 접근

도서관법 제5조(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①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보존·정리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 위의 법 외에도 문체부에서 관리하는 각종 문화시설 및 관광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기능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경륜경정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역시 관련 시설에 대한 내용을 다루지만, 기능적인 시설이라는 측면에서만 접근한다는 점에서는 유사
- 관광과 관련하여 관광기본법 역시 관광시설을 관광객의 편의 증진이라는 기능적인 측면에만 초점
- 관광지 조성 계획과 관련하여서는 관광진흥법에서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부분에만 관여

관광기본법 제8조 (시설의 개선) 정부는 관광객이 이용할 숙박·교통·휴식시설 등의 개선 및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관광기본법 제12조 (관광지의 지정 및 개발) 정부는 관광에 적합한 지역을 관광지로 지정하여 필요한 개발을 하여야 한다.

-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시설 조성 및 이를 위한 재정 지원, 허가에 대한 근거들을 마련하고 있으나, 정작 이를 담는 시설인 건축 자체에 대한 관심은 문화활동으로 보고 있지 않으며, 건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에 대한 접근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2) 건축과 공공디자인의 분리

- 문체부는 디자인공간문화과(2005년 공간문화과신설, 2013년 시각예술디자인과로 개편)에서부터 가로 경관 개선 등 공공디자인 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2016년에는 “가로경관 및 공공공간을 위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공디자인 사업에 관여해오고 있다.
 - 공공디자인진흥법 제정 이후 공공디자인진흥종합계획 수립, 공공디자인진흥기반 조성, 공공디자인진흥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 조사 중
- 다만, 해당 법에서 공공디자인의 범위를 공공시설물로 제한하고 있는데, 법 2조 정의에 따르면 공공시설물은 다음과 같으며, 여기에서 건축물은 제외되어 있어 건축과 공공디자인을 함께 다루는데 한계가 있다.

가. 대중교통 정류소, 자전거 보관대 등 대중교통시설물

나.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펜스 등 보행안전시설물

다. 벤치, 가로 판매대, 파고라 등 편의시설물

라. 맨홀, 소화전, 신호등 제어함 등 공급시설물

마. 가로수 보호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등 녹지시설물

바.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안내시설물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

-

- 건축기본법에 따라 통합적인 공간환경을 다루기 위해서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공공공간 등을 함께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나 국토부의 건축법이나 문화부 공공디자인 관련법에서 공간환경을 통합적으로 다루기 위한 협력 체계는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가 없다. 건축정책위원회가 이 역할을 할 수 있으나, 현재 건축정책위원회는 부서별 협력 역할을 하기에는 업무 범위가 크게 축소된 상태이다.

2.2.2 국내 문화예술공간의 질적 개선 필요

1) 시설의 양적 성장에만 치중

- 국내 문화예술공간인 시설은 양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
 - 공공도서관, 박물관, 문예회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인구 수에 비례하여 거의 균등하게 전국적으로 배분
 - 문예회관의 경우, 1980년대부터 1지자체당 1문예회관이라는 목표에 따라 광역시와 시, 군 단위에서 대부분 조성되어 있으며, 공공도서관, 박물관 역시 군 단위까지 분포

표 2-7 2016년 공공 문화예술공간 조성 현황

출처 : 2016 전국문화시반시설 총람 (공연장 제외)

	국립도서관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합계	1	978	826	219	229	228	114
서울	1	146	120	37	19	25	8
부산		36	19	6	11	14	1
대구		33	16	4	11	8	
인천		46	30	4	8	8	1
광주		21	10	9	7	5	4
대전		24	16	5	3	5	3
울산		17	9		4	5	4
세종		4	6		1	1	
경기		228	139	49	34	31	11
강원		53	96	11	18	18	10
충북		42	45	8	12	11	8
충남		58	46	9	18	16	7
전북		56	40	13	15	14	11
전남		64	46	25	19	72	5
경북		64	65	11	26	23	7
경남		65	60	9	20	20	16
제주		21	63	19	3	2	18

- 양적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진 것에 비해 건축 디자인 측면에서는 권위적인 성격을 보이며, 접근성이 좋지 않다. 또한 시설 조성 자체에만 집중되어 있어 주변 공공공간 및 다른 시설과 연계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 한국문화예술연합회에서 실시하는 시설 현황에서도 기능의 분포(전시장, 공연장, 교육장, 정보실, 회의장 등), 편의시설의 분포 (주차장, 장애인 편의시설, 방문객 편의시설 등), 부대시설의 분포 (분장실, 영사시설, 연습실 등) 등 기능적 시설 분포 측면에만 접근⁴⁾
 - 접근성, 주변과의 연결성에 대한 고려 부재



그림 2-1 부산문화회관(좌), 광주문예회관(우)
 부산문화회관과 광주문예회관의 경우 외부공간을 마련했으나 차량접근로로 인하여 보행 동선과 분리 기념비적인 스케일과 열주랑으로 이루어진 디자인



그림 2-2 리모델링을 통해서 가로 공간과 연결성 향상 사례
 예술의 전당 리모델링 전(좌), 리모델링 후(우)

- 법에서부터 건축 및 공간환경 전체에 대한 접근, 이용자들의 생활문화공간으로서 문화예술공간을 접근한 것이 아니라 기능적인 측면의 시설로만 바라본 것에 대한 부작용으로 볼 수 있다.

4) 2015년 문예회관 운영현황 조사,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pp.11-23

2) 사업 과정에서 기획 단계 부재

- 문체부에서 진행하는 문화예술공간 사업의 경우, 직접 담당하는 자체 사업과 지원금 보조 사업이 있다.
- 직접 진행하는 사업의 경우, 기획 단계는 대부분 단발성 용역으로 발주하여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획 용역의 다수는 문화관광연구원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문화관광연구원의 경우 건축전문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
 - 2015년 예산이 집행된 자체 사업 중 문화관광연구원에서 진행한 사업은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 경북도청, 충북도청 활용 방안 등이 있음
 - 문화관광연구원의 주요 업무 내용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주요 업무

문화·관광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조사·연구/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한 조사·연구
예술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 문화 복지 및 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사·연구
전통문화 및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 남북한 문화통합 및 북한 문화예술 연구
관광자원 개발 관련 조사·연구/ 국민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 국민 여가생활에 관한 조사·연구
관광서비스 부문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 문화·관광 관련 각종 자료의 조사, 수집
문화·관광 관련 연구용역의 수탁 및 위탁/ 조사·연구결과의 출판 및 교육/ 문화·관광정보화 개발 및 정보서비스
문화관광 통계 생산·개발 및 분석/ 문화·관광 정책평가 조사·기획·연구·사업

- 다수 사업의 경우 재정지원 사업으로 진행된다. 사업 내용 검토 후 지원 형식으로 일회성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의 다른 사업과 연계가 부족하며, 기획 단계에서부터 전문가가 개입하지 않고, 지원 결과에 따른 평가로만 선정되는 한계가 있다.
 -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자가 국고보조 지원신청을 할 경우, 사업내용 검토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국고 지원이 이루어지는 순서로 진행
 - 공모사업의 경우 지원 신청 사업에 대한 리뷰 및 선정에 있어서 외부 전문가 초빙, 자문 형식으로 진행
 -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공모사업) 경우 문체부에서 구성한 컨설팅단이 선정평가 기준(공간잠재력, 사업계획타당성, 추진체계 적정성, 사업효과성)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
- 소규모 문화시설 등 콘텐츠 결합이 중요한 시설 조성사업에 있어서도 대부분 재정지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 지역 소규모 문화시설의 경우 주민자치센터, 문예회관 등을 리모델링하여 복합형 문화커뮤니티 센터 조성, 지역사회 문화동호회 활동 거점 조성 사업으로 시설 조성사업과 활성화방안 지원 사업이 있음

- 지역 소규모 문화시설 사업 진행은 다음과 같음 : 사업계획 수립 및 공모(문체부) → 사업신청(지자체) → 현장실사 및 컨설팅 등(문체부) → 사업계획 보완(지자체) → 최종선정(문체부) → 사업추진(지자체) → 컨설팅 지속지원(문체부)
- 해외문화원 사업의 경우에도 재정지원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이러한 해외 사업들은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에서도 제시했듯이 해외문화원 등은 한국의 문화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획 및 디자인 단계가 매우 중요한 사업이나 이러한 단계에 전문가들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는 편이다.
- 해외문화원의 경우, 현재 문체부에서는 2015년 기준 3개소 해외문화원 신설, 총 28개 해외문화원 운영하고 있는데, 해외문화원 공간 조성 시 기존 공간 대수선 및 리모델링으로 진행
- 해외 작은 도서관 조성은 2015년도 15개관 조성

2.3 문화재 관리 방안 개선 필요

2.3.1 경직된 보존 중심의 문화재 관리 체계

- 현재 문화재 인근에 신축 및 증개축 등 사업이 진행될 경우 ‘문화재 현상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화재 현상변경’의 허용 기준이 양적으로 획일화되어 있다.
- 현상변경 허가 기준은 문화재들이 당면한 조건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별도로 지정하고 있지 않으며, 신청별로 관계 전문가와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판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양적 기준을 만들어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상황
- 문화재의 특성과 문화재 주변의 종합적인 환경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건축물의 허가 기준으로만 활용하고 있는 상황

서울시 문화재 주변 건축물 높이기준 사례

[별표1](조례 제14조의 2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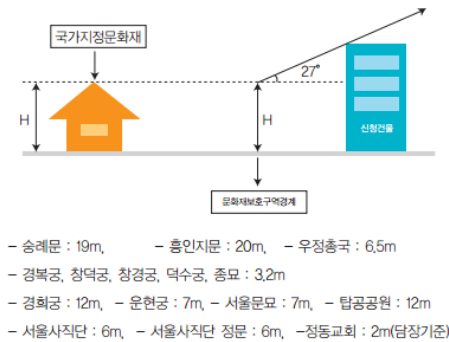
1. 4대 문안(內)(문화재별로 2단계 구분 실시)

(1) 기준 1 :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지표면에서 문화재 높이를 기준으로 양각 27°

선 이내

대 상 : 4대 문안(內)의 아래 문화재

예시)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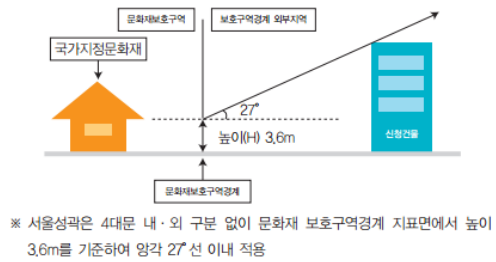


(2) 기준 2 : 문화재 보호구역경계 지표면에서 높이3.6m를 기준으로 양각 27° 선

이내

대 상 : 4대 문안(內) 소재한 기준 1의 대상 문화재를 제외한 문화재

예시) 단면도



- 또한 허가 판단 과정 중 “관계 전문가”에 건축전문가가 부재하여 문화재가 주변 공간환경과 더불어 가질 수 있는 역할에 대한 고민 대신 문화재 자체에 미치는 영향만 판단하고 있다.
- 현상변경 과정 진행 순서 : 허가신청서 작성 (시·군·구 문화재담당과에 제출) → (시·도 문화재담당과 경유) → 문화재청 접수 → 관계전문가 검토(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및 문화재 위원회 심의) → 허가여부 통지(시·도<시·군·구> → 신청인)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관계전문가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문화재보호법 제55조(시·도 지정문화재 지정 등)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설치된 문화재에 관한 자문기관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서 그 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사 이상의 학예연구직 공무원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 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은 2014년에 ‘역사문화환경 정책자문단’을 구성하여 문화재 주변의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리하려는 정책개발을 시도한 바 있으나, 기획 단계 용역을 발주를 통한 일반적인 지침으로만 축소하고,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법제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 ‘역사문화환경 건축설계안내서’를 발간 진행하였으나, 이 경우 건축물과 문화재별 개별 특수성에 대한 성격을 살리지 못하고 일반적이고 피상적인 해

법만을 제안

- 문화재의 경우 문화재 및 주변 환경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며, 이 경우 각각의 특수한 상황들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개별 사업 당 충분한 연구와 기획이 필요하다.
 -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기획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연구 인력 필요
 - 문화재 하나가 아니라 주변 공공공간 및 건축 등 통합적인 접근 방법 필요
 - 이를 위한 법제 개선 필요

2.3.2 근대 건축문화유산 관리 및 활용의 한계

- 근대 건축물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로 구분되며, 그 외 지정되거나 등록되지 않은 건축물로 구분되어 있는데, 근대 건축물은 지정문화재에 비해 등록문화재 비중이 높다.
 - 2014년 7월 1일 기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에서 관리하는 근대건축물은 지정문화재 사적 37건과 등록 413건으로 총 450건
 - 근대건축물은 목조 고건축물에 비해 일반 국민들이 중요한 전통문화재로 인식하고 있는 비중이 낮으며, 현재에서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에 비해 규제가 완화되어 있으며, 보존과 활용을 위한 소유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 근대 건축물의 경우 등록문화재로서 지정은 받았지만, 이를 보존 활용할 수 있는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데, 특히 전통 목조건축에 비해 전문가 및 연구 체계가 부족하다.
- 등록문화재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면 만들어진 후 50년 이상 지난 것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건축물이라도 가치가 있는 경우, 보존 및 관리에 누락될 수 있다.

2.4 건축전문교육 및 연구 활동 개선 방안 필요

2.4.1 소규모 설계사무소 지원 방안 필요

-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건축계획, 건축설계, 설계감리)의 종사자수는 2012년 기준 약 5.7만명이며, 매출액은 약 5.1조원 규모임.
 - 매출액의 경우 건설업 규모는 약 204조, 건축 엔지니어링(건축조사, 건축구조, 건축설비 등) 규모는 약 13.5조원 규모
 - 건축 엔지니어링 분야 종사자 수는 약 10.9만명으로 1인당 매출액 규모가 건축설계 및 관련 분야가 엔지니어링 분야에 비해 더 적음.
- 2007년 이후 2012년까지 소규모 사업체가 늘어나고 있으며, 사업체당 매출액은 감소하고 있음.
 - 2007년에서 2012년 사이 사업체 수는 7233개에서 9060개로 약 25.26% 증가했으나 종사자 수는 52,844명에서 27,219명으로 약 8.28% 증가하는데 그침.
 - 이 기간 동안 매출액은 4.2조원에서 5.1조원으로 3.3% 증가했으며, 이는 사업체당, 종사자 1인당 매출액 모두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줌.

표 2-8 연도별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산업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출처 : 건축서비스산업 통계 구축 및 실태조사 연구, 국토교통부, 2014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사업체수(개)	7233	7387	7194	7495	8093	9060
종사자수(명)	52,844	58,262	55,986	58,196	56,641	57,219
매출액(백만원)	4,225,871	4,987,897	4,591,755	4,948,988	4,921,523	5,070,651

- 2007년에서 2012년 사이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 수는 6.7% 증가했으나, 50명 이상의 사무소는 2.18% 감소
- 2012년 기준 5인 미만 사무소의 비율은 전체의 약 75%에 달하고 있으며, 50명 이상 규모 사무소 비율은 전체의 약 1.3% 남짓

표 2-9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산업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출처 : 건축서비스산업 통계 구축 및 실태조사 연구, 국토교통부, 2014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1-4명	5-9명	10-19명	20-49명	50명 이상
2007(개)	4,951	1,426	510	212	134
2012(개)	6,851	1,492	401	196	120
변화율(%)	6.71	0.91	-4.70	-1.56	-2.18

- 소규모 사무실이 증가하고 있지만, 매출액의 대부분은 대형 사무실에 편중되어 있어, 소규모 사무실의 매출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 2010년의 경우 약 1% 남짓인 50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에서 전체 매출액의 약 51.7%를 담당하고 있음.

표 2-10 2010년 종사자 규모별 매출액

출처 : 건축서비스산업 통계 구축 및 실태조사 연구, 국토교통부, 2014

사업체 규모 (명)	1	2-4	5-9	10-19	20-49	50-99	100-199	200-299	300이상
매출액 (백만원)	87,607	608,283	599,629	496,886	613,042	486,058	606,522	289,624	1,191,337
비율(%)	1.76	12.22	12.04	9.98	12.31	9.76	12.18	5.82	23.93

- 매출 규모가 작은 소규모 사업체 수가 대부분이며, 종사자 개인으로도 매출액이 크지 않다.
 - 2012년의 경우 매출 10억 미만의 사업체 수가 전체의 약 93%를 차지하며, 이 중 약 44.3%가 연 매출 1억 미만인 반면, 전체 사업장의 0.6%만이 연 매출 100억 이상임
 - 건축설계산업 종사자의 45.7%가 연매출 10억 미만이며, 1억 미만인 경우도 11.3%에 달함

표 2-11 2012년 매출액 규모별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사업체 종사자

출처 : 건축서비스산업 통계 구축 및 실태조사 연구, 국토교통부, 2014

매출액(백만원)	-100	100-1,000	1,000-10,000	10,000-30,000	30,000-
사업체 수(개)	3,712	4,655	623	40	20
종사자수 (명)	6,463	9,698	15,257	7,343	8,466

- 소규모 사무실에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이 소규모 사무실이 인력 규모뿐만 아니라 매출액 규모면에서 작을 뿐만 아니라, 일인당 매출 규모에 있어서도 작은 영세한 사무실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러한 소규모 사무실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특화된 분야 마련, 사무실 지원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
 - 비교적 손쉽게 소규모 사무실들이 설계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소규모 설계공모 활성화 방안 마련
 - 사무실 공간, 장비 등 지원 방안 마련
 - 설계 기획 및 연구 분야 확대
- 소규모 사무실이 증가함에 따라, 설계시장으로 진입하는 신진 건축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 교육에서부터 변화가 필요하다.
 - 기획, 연구 분야를 포함하여 건축설계 분야의 업역 확대가 필요하며 대학 교

육에서부터 이러한 분야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

2.4.2 신진 건축 전문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 필요

- 건축학 교육 인증 도입에 따라 대학에서 설계 교육 강화되고 있다.
 - 국제적 기준에 맞춘 건축설계 실무 역량을 갖춘 전문인 양성을 목적으로 건축학 교육 인증제도 도입과 건축사법 개정(2012)
 - 앞으로 국내에서 건축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인증을 받은 교육 프로그램을 졸업하고 일정 기간 실무 경험을 가져야 함
 - 건축학 인증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현재 국내에는 5년제 학부 프로그램, 3년제 건축학 석사 프로그램 등 일반 대학 및 대학원보다 긴 교육 과정에 운영되고 있으며, 건축설계교육의 질도 상당 부분 개선
 - 2016년 1월까지 72개의 5년제 및 5개의 대학원 건축학전문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현재 51개 프로그램이(5년제 50개, 대학원 1개) 인증을 취득
 - 5년제를 포함하여 건축학 교육 인증을 받거나 준비 중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일차적으로 건축설계 실무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며, 교육 프로그램도 이에 맞게 구성
- 그럼에도 건축학 졸업자들의 건축설계 직종 진입 현황을 볼 경우 상당수의 학생들이 건축과 상관없는 직종으로 이탈하고 있다.
 - 5년제 대학 입학 정원은 평균 약 39명, 졸업생 수는 평균 약 31.5명으로 약 10명, 즉 1/3 가량이 이탈하거나 졸업을 유예하고 있는 상황

표 2-12 2015년 5년제 대학 입학정원 현황

출처 : 건축학교육인증과 건축사자격제도의 개선방안, 이충기, 서울시립대학교

연도	대학 수	정원	대학정원 평균	비고
2015	71	2802	39.5	4개 대학 신설
	67	2611	39.0	

표 2-13 2015년 5년제 대학 졸업자 현황

출처 : 건축학교육인증과 건축사자격제도의 개선방안, 이충기, 서울시립대학교

연도	대학 수	졸업자 수	대학 평균	비고
2007	39	543	13.9	5년제 최초 졸업
2008	58	1002	17.3	
2009	60	1338	22.3	
2010	63	1440	22.8	
2011	65	1929	29.7	
2012	66	1928	29.2	
2013	67	1839	27.4	
2014	45	1283	28.5	인증 받은 대학 데이터만 포함
2015	47	1477	31.5	

- 졸업자의 경우도 인증을 받은 대학 졸업자의 30-40%만 설계사무소 및 건설 회사로 진출, 약 10%는 건축 관련 직종으로 진출, 나머지 약 40-45% 졸업자는 건축 외의 직종으로 진출

표 2-14 2010-2015년 5년제 인증 대학 졸업생 건축 및 건축 관련분야 취업현황

출처 : 건축학교육인증과 건축사자격제도의 개선방안, 이충기, 서울시립대학교

구분	인 대 증 학	졸 업 생 수	취업자수												기 타 5)	총 계	
			건 축 분 야				건 축 관 련 분 야										
			설 계 무 소	건 회 설 사	소 계	%	인 테 리 어	공 무 원	유 학	대 학 원	소 계	%	계	%			
2015 6)	47	1477	547	90	637	43.1	18	15	13	116	162	11.0	799	54.1	678	1477	
2014	45	1265	414	94	508	40.2	22	19	11	105	157	12.2	665	52.6	600	1265	
2013	40	1188	322	74	396	33.3	28	12	24	100	164	13.5	560	47.1	628	1188	
2012	33	1086	326	98	424	39.0	9	6	22	115	152	13.6	576	53.0	510	1086	
2011	29	960	368	63	431	44.9	12	10	19	104	145	15.1	576	60.0	384	960	
2010	21	621	303	34	337	54.3	2	9	31	57	99	15.9	70.2	70.2	185	621	

- 현재 건축설계를 할 수 있는 국가면허인 건축사의 합격률이 매우 낮아서 건축설계 전공자가 실제 실무를 할 수 있는 비율이 비현실적으로 낮기 때문에 건축사 면허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 건축사 시험 합격률 평균이 약 9.35% (2006년-2015년)이며, 5년제의 경우에도 12.8%에 불과

5) 건축 직종 외 취업/취업준비/군/미조사 등

6) 2015년 2월 기준

표 2-15 연도별 5년제 졸업자 건축사자격시험 응시 및 취득 현황

출처 : 건축학교육인증과 건축사자격제도의 개선방안, 이충기, 서울시립대학교

구분	전체					5년제		
	응시자	20대-60대		20-30대		응시자	합격	%
		합격	%	합격	%			
2015	5164	904	17.5	500	9.6	811	104	12.8
2014	4923	469	9.5	244	4.9	569	24	4.2
2013	4618	589	12.7	364	7.8	221	10	4.5
2012	3985	455	11.4	324	8.1	41	0	0

- 건축설계에 대한 전문적인 학업을 마치고 사회로 진출하는 전공자들을 위하여 소규모 설계 일이 많아져서 설계 업무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 건축설계 업역의 확대, 즉 기획, 관리 등의 업무 영역으로 건축을 전공한 학생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전문 기획 분야 확대가 필요하다.

2.4.3 특화된 건축교육 프로그램 개발 필요

- 건축학 교육 인증 도입에 따라 국내 건축 교육은 한국건축교육인증원이 제시한 30개의 학생수행평가 항목을 만족시키도록 하고 있는데, 이 30개의 학생수행평가 항목은 건축실무를 위한 기술적 능력 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내용에 관련된 부분은 학교 자율에 맡겨져 있다.

표 2-16 학생수행평가 항목과 건축학교육 인증기준

별표 1 교육과정인증기준평가표

구분	수행평가 항목	배점	가(x1.0)	나(x0.8)	다(x0.6)	라(x0.4)
전체이수 학점		5	160+	155-159	150-154	150-
교양과목 이수학점		2	40+	35-39	30-34	30-
커뮤니케이션	구두 및 문서표현, 다양한 표현 능력	3	6+	4-5	3	3-
문화적 맥락	과학기술 및 예술, 세계건축사와 전통, 한국건축사와 전통, 건축과 사회, 인간 행태, 지속가능한 건축과 도시	9	18+	16-17	12-14	12-
설계	형태와 공간구성, 분석 및 프로그램, 대지의 문화 역사적 맥락, 대지조성, 무장배설계, 안전 및 피난, 시스템통합설계, 증개축 보수, 건축과 도시설계, 종합설계	이수학점	18	50+	45-49	40-44
		학점:시수 비율	8	1:2	1:1.8	1:1.6
기술	구조원리의 이해, 구조시스템, 지속가능한 환경조절, 환경시스템, 건축설비시스템, 컴퓨터응용기술, 건축재료 및 활용, 시공 및 건설관리	9	24+	21-23	18-20	18-
실무	건축가 책임과 직업윤리, 프로젝트 수행과 역할, 건축법규, 사무소 운영과 관리	8	6+	4-5	3	3-
전공선택 이수학점		8	21+	18-20	16-17	15-

- 그러나 인증을 수행하고 있는 다수의 학교들이 인증을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해 학생수행평가 항목을 그대로 보수적으로 따르면서, 현재 교과과정의 획일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⁷⁾
- 업역 확대를 위해서는 산업계에서 변화와 함께 학교 교육 과정에서 인증에서 요구하는 학생수행평가 항목에 해당되는 기본적인 설계 교육 외에 특화된 분야에 대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가 필요하다.

2.4.4 공학 중심의 교육 및 연구 활동 탈피 필요

- 건축 전문 교육의 경우, 국내 교육 분야에서는 공학 분야로 구분하고 있으며, 공학기술 이외의 측면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루고 있다.
 - 한국교육개발원 학과(전공) 분류에 따르면 크게 인문계, 사회계, 교육계, 공학계, 자연계, 의약계, 예체능계 등 7개 계열로 국내 교육 계통을 구분하며, 이 중 건축은 공학계열에 포함
 - 한국교육개발원 전공분류 중 건축(중분류)에 대한 설명에서 건축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설명은 제외

중분류체계 - 라. 공학계열 - 1) 건축

건축 영역은 건축물의 설계·건축·유지 등을 위한 이론과 기술체계를 연구하는 건축학과 건축에 관한 구조·재료·계획·공법·역학·환경문제 등을 연구하는 건축공학 등에 바탕을 둔다. 건축학 및 건축공학은 대체로 건축구조·건축환경·계획·건축설비의 3가지 분야로 이루어져 있다. 건축구조에는 건물의 기초를 연구하는 기초공학, 건물의 골조·기둥·보·바닥 등의 강도나 변형을 연구하는 구조역학, 건물의 구조재료가 되는 철골이나 철근 콘크리트의 재질을 연구하는 재료역학 등이 있다. 건축환경 계획은 건물환경 특히 실내 환경에 영향을 주는 음향·채광·조명·일조·온습도·환기통풍 등을 연구하는 분야이며, 건축설비는 급배수·냉난방·공기조화·전기·소화설비 등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소분류체계- 23) 건축

건축 분야는 인간생활을 영위하는 공간 창조를 위한 학문으로서 건축전반에 걸친 공학 기술적 및 예술적 측면의 교육을 통하여 건축의 계획 및 설계에서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의 지식을 터득케 하고, 장차 사회에서 건축설계, 시공 및 기타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이론과 실재를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둔 학문이다. 관련 학과로는 건축과, 디지털인테리어과, 실내건축과, 인테리어건축과, 건축환경학과 등이 있다.

2015 학과(전공) 분류 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

- 건축 분야 연구는 현재 대부분 건설 기술 연구 쪽으로 치중되어 있으며,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연구소 대부분 국토 계획 및 건설 기술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 2016년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주요 R&D 분야는 건설기술부문, 교통기술부문, 기반구축부문으로 구분. 주요 주제에 있어서도 제로에너지, 초고층 건축 기술, 센서 기반 재해 감시, SOC 시설물 성능평가, 지속가능한 하천관리, 유기성 폐자원 활용, 스마트 홈 등으로 건축설계 디자인 품질 향상 등에

7) 건축학교육인증과 건축사자격제도의 개선방안, 이충기, 서울시립대학교

관련된 내용은 제외

- 국토교통부 산하 연구소 주요 활용 내용에서도 건축디자인에 관련된 연구는 제외

표 2-17 국토부 산하 주요 연구소 및 연구소 주요활동 내용

국토부 산하 연구소	연구소의 주요 활동 내용
국토연구원	국토계획 및 지역 연구(국토 및 지역 정책, 국토계획 평가, 지역경제 등), 도시연구 (도시정책, 도시재생, 도시방재, 스마트 녹색도시), 주택 및 토지 연구 (주택정책, 부동산 시장, 토지정책, 건설경제 등), 국토인프라 (인프라 정책, 도로정책, 첨단 인프라 기술 등), 국토정보연구 (공간정보, 국토정보 등), 개발도상국 컨설팅 및 기술 지원 등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정책연구소, 도로연구소, 구조융합연구소, 지반연구소, ICT융합연구소, 수자원 및 하천연구소, 환경 플랜트 연구소, 건축도시연구소, 화재안전연구소, 미래융합연구소. 이 중 건축도시연구소의 주요 연구 분야는 녹색건축 및 제로에너지, 주거환경성능, 그린 리모델링 보급 활성화, 건물에너지관리 기술 및 시스템 최적화, 기후변화 대응, 서민주거환경 선진화 건축기술 확보, 지속가능 생활공간 구축기술 확보 (저탄소, 순환자원 등), 건축분야 품질시험업무 등
한국교통연구원	교통 관련 연구

- 국토연구원 산하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건축 및 도시 공간 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의 일정 부분 담당하지만 정책 연구라는 한계가 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주요 연구 분야는 다음과 같다.

건축·도시환경의 공공성 및 향상을 위한 정책 연구

건축·도시 디자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 수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간정책 수립 및 건축·도시공간 개선사업에 대한 지원

건축·도시공간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연구

건축·도시공간 분야의 공공사업에 대한 민간전문가 참여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

건축·도시공간 및 건축문화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 건축 설계 및 콘텐츠 개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자 양성 및 지원 기관이나 체계가 부족하며, 지금까지는 개별 사업 용역 중심으로 연구 활동이 진행되어 왔다.

3. 프랑스 국가건축전략 보고서 시사점

3.1 프랑스 국가건축전략 보고서 개요 및 주요 내용

- 1977년 제정 건축법에서 건축가의 역할 확대를 통한 공공이익 증대 목적으로 2013년부터 건축전략수립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프랑스 문화통신부 주도로 2015년 프랑스 국가건축전략보고서를 마련하였다. 국가건축전략보고서 마련을 위하여 그 이전 단계에서 다음 보고서 작업들을 실행하였다.
 - 2013년 4월 “건축분야 고등교육 및 연구에 관한 합의”와 Vincent Feltesse 와 Jean-Pierre Duport 보고서
 - 2014년 7월 “건축창작”에 관한 Patrick Bloche 보고서
- 국가전략을 준비하기 위해 3개의 팀이 관심고취, 혁신, 개발이라는 세 개의 목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프랑스 건축 및 도시계획, 조경 전문가(AJAP)가 주도하였다. 이외 경제, 문화 관계자 파트너 대표들, 시민사회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의원, 국회의원, 건축 전문가, 실무자와 과학자 등 10여 명이 참여하였다.
- 전략 수립에 필요한 적절한 진단 요소 발견, 이를 관계자들과 공유, 이를 실천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조직 구성을 기반으로 한다. 보고서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건축분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 원칙 수립
 - 관련 기존의 많은 활동들을 가시화, 조직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공공 및 민간 관계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관련된 사업 및 실험을 장려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2015년 10월 최종 발표한 국가전략보고서는 6개 전략과 30개의 조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30개의 조치들은 국가건축정책 전략의 기반을 이루는 것으로, 실행 방안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국회에서 2015년 10월 6일 1차 심의에서 가결된 ‘창작의 자유, 건축 및 문화유산에 관한 법’에 포함된 법률적 조치들
 - 부서 간 업무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비법률적 조치

- 신속히 적용될 수 있는, 문화통신부 관할에만 속하는 비법률적 조치
- 전략팀 관리자들과 이 전략의 여러 파트너들과 연결된 중기 프로젝트

- 6개 전략과 30개의 조치의 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18 프랑스 국가건축전략 보고서 전략 및 실행조치

6개의 전략	30개의 실행조치	기한
A축 일반 대중, 건축의 모든 공공과 민간 이해관계자의 건축지식에 대한 인식고취와 건축지식 개발	1. 건축을 기념하는 연례 국가행사 조직	2016
	2. 학교에 프랑스 건축의 날 재정	2016-2017
	3. 교사를 위한 형태, 공간 자료 발간	2016-2017
	4. 프랑스 건축 그랑프리 활성화	2016
	5.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의원들을 대상으로 건축에 대한 교육 실시	2016
B축 20세기, 21세기의 건축유산을 고려하고, 기존 건축 환경의 가치를 높이고 개선하기 위한 건축개입	6. 100년 이하의 건물을 위한 새로운 인증제도 확립	"창작의 자유, 건축 및 문화유산에 관한 법률" 제정
	7. 기존 건축물예의 개입에 관한 건축가 초기교육 및 지속교육 강화	2016-2017
	8. 건물에 건축가 이름 부착	"창작의 자유, 건축 및 문화유산에 관한 법률" 제정
	9. 건축가 도덕적 권리 가이드 배포	2016
	10. 재개발 관계자들과 함께 건축을 통한 우선지역 개발	2016
C축 교육-연구-실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건축실무와 생활환경의 연계 강화	11. 교육법에서 국립건축학교(ENSA)를 인정하고 더 높은 가치 부여	"창작의 자유, 건축 및 문화유산에 관한 법률" 제정
	12. 전국적으로 국립건축학교들의 역량강화	2016
	13. 연구교수의 사회적 지위 확립	2016-2017
	14. 프랑스국가공인건축사(HMONP) 자격 평가 실시	2016-2017
	15. 건축학교에 데모(demo) 건설현장, 인큐베이터, "팹랩"(제작실험실) 공동 작업공간인 "코워킹" 설치	2016
	16. 2020년까지 건축회사에 "100명의 박사학위 준비자" 고용	2020년까지 점진적 실행
	17. 연구파트너십 강좌 신설	2016-2017
D축 건축 역량 강화	18. 프랑스문화사업지방국(DRAC) 내에서 건축의 역할에 대한 이해 향상	2016-2017
	19. 프랑스건축·도시계획·환경위원회(CAUE) 임무의 중요성 재확인	"창작의 자유, 건축 및 문화유산에 관한 법률" 제정

	20. 분양토지의 개발허가를 위한 건축가 개입을 통해 건축품질 향상	“창작의 자유, 건축 및 문화유산에 관한 법률” 제정
	21. 건축가의 의무 개입 하한선을 150㎡로 강화	“창작의 자유, 건축 및 문화유산에 관한 법률” 제정
	22. 의무개입 하한선 이하 면적 개발에 대해 건축가가 개입할 경우 건축허가 획득 절차 단순화	관심표명 요청, 2015년 말 실험 시행, 2016년 도입
E축 건축의 경제적 가치 판별 및 업무 영역 확대 지원	23. 건축의 경제적 가치 연구	2016-2017
	24. 공공발주에서 설계공모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절차에서 협상단계 조건을 명시	“창작의 자유, 건축 및 문화유산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공공발주에 대한 규제법”
	25. 신생 설계사무소들의 지원 및 세대 간 연대 촉진	2015년 말부터 시작, 중기 프로젝트
	26. 건축 BIM 기반 구축	2016
	27. 미래 직업을 고안하기 위해 건축사협회 지원	2016
	28. 프랑스건축 해외진출 지원	2016년부터 시작, 중기 프로젝트
F축 실험 방식과 그 문화적 가치 지원	29. 건축의 품질, 창작 및 혁신 촉진	“창작의 자유, 건축 및 문화유산에 관한 법률” 제정
	30. «실행허가» 실험	“창작의 자유, 건축 및 문화유산에 관한 법률” 제정

- 전략 수립 이후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일정은 다음과 같다.

표 3-19 프랑스 국가건축전략보고서 이후 추진 일정

시기	일정
2014년 10월	건축 국가전략 발표
2015년 2월	전략팀 발족
2015년 7월	전략팀 제안서 제출
2015년 9-10월	창작의 자유, 건축 및 문화유산에 관한 법안 국회에서 1차 심의
2015년 10월 20일	국가전략 첫 번째 조치 발표
2015년 말-2016년	중기 프로젝트의 속행작업으로서 즉각적 조치 실행
2016년	창작의 자유, 건축 및 문화유산에 관한 법안에 관한 심의 속행 및 최종 가결
2016년 가을	제 1회 국가 건축의 날. 건축 국가전략 실행의 포인트 단계

3.2 프랑스 국가건축전략 보고서 주요 실행 조치 검토 및 국내 도입 방향

3.2.1 일반 대중과 건축 관계자의 건축에 대한 관심 향상

- 문화의 표현으로서 건축을 가깝게 여기고, 건축에 대한 욕구 창출 목표
 - 모든 대중, 특히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건축에 대한 관심 고취
 - 의사결정자들을 대상으로 건축에 대한 교육 및 교류 활동 개발
- (조치 1) 건축 관련 행사를 통합적, 체계적으로 조직
 - 프랑스의 건축분야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의 날, 건축의 주, 건축의 달, 수상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들을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유도
 - “유럽 문화유산의 날”, “유럽 박물관의 밤”, “국가 고고학의 날”, “공원에서 의 약속”과 같은 행사를 참조
 - 관련 건축 단체, 즉 건축·도시계획·환경위원회(이하 CAUE), 국립건축학교, 예술과 역사 도시국가네트워크 등과 협의 운영

국내 도입방안 :

- 국내의 경우 문체부는 “대한민국 건축문화제”를 지원하고 있으나, 일반인들의 관심이 크게 부족한 상태이며 행사 프로그램도 어린이 건축학교 전시를 제외하고 대부분 수상작 위주의 전문가 대상 전시로서 일반인들이 관심을 갖기 어려움
- 국민들의 공감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근본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한 상황으로 건축가협회 외에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함

- (조치 2) 학교에 프랑스 건축의 날 제정
 - 프랑스국가건축의 날(조치 1) 행사와 연계하여 학교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건축에 대한 관심 고취
 - 지역 커뮤니케이션 캠페인과 연계하여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 사회로 건축에 대한 관심 확대

국내 도입방안 :

- 국내의 경우 “대한민국 건축문화제”에서 ‘꿈다락 어린이 건축학교 전시’를 하고 있음. 문화제 개최 기간과 연계하여 결과물 전시만 아니라 초등학교와 지역 사회를 대상으로 건축과 관련 소규모 이벤트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함
- 이를 위해서는 프로그램 기획과 교육 도구, 자료 개발이 필요함

• **(조치 3) 교사를 위한 형태와 공간에 대한 관심고취 자료 발간**

- 일선 교사들을 대상으로 건축 공간 관련 교육 자료들을 국가교육부 자료원의 인터넷 포털 “Eduscol”에 공개 예정
- 초기에는 저학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시작하며, 점차 모든 학년으로 확대 예정

국내 도입방안 :

-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초등학교 건축 교재(건축창의교실)를 개발한 것을 비롯하여, 아르코 미술관건축교육(아르코 미술관, 정림건축문화재단, K12 건축학교), 어린이창의교실(대한건축사협회), 서울어린이건축학교(서울시) 등 기관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건축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 대부분 프로그램들이 건축가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며, 비교과 프로그램으로서 특별활동 성격임
- 비교과 프로그램 외에 정규 사회 교과 및 미술 교과 등 관련 교과과정에 건축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도록, 먼저 건축과 관련되어 기본적으로 전달해야할 내용을 연구하고, 현재 교육 커리큘럼과 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전문가들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조치 4) 프랑스 건축 그랑프리 활성화**

- 좋은 사례가 될 만한 건축가들의 작업 방법과 결과물 홍보
- 수상뿐만 아니라 전시회 개최, 저작물 출간 기회 제공
- 국립건축학교 학생들을 위한 마스터클래스 수업 진행

국내 도입방안 :

- 문체부 주관 젊은건축가상이 있으며, 이 외 국토부와 건축사협회의 대한민국 건축문화대상, 건축가협회의 건축가협회상 등이 있음. 현재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수상자 전시회들을 개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인지도가 낮은 상황임
- 건축문화제와 연계하여 건축에 대한 인식전환으로 삼을 수 있는 기회 확대가 필요함
- 건축학과 학생들과 수상자들 사이의 소통을 위해 문체부에서는 강연과 워크숍이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음. 이 경우 건축학과 학생들에게는 현장감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수상자들에게는 홍보의 기회가 될 수 있음

• (조치 5)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의원들을 대상으로 건축문제에 대한 교육 실시

- 공공정책의 공간 문제에 대해 정부 행정관리들과 건축교사들의 인식 향상
- 지역행정기관(IRA), 국토연구 국립연구소(INET), 국토 공공서비스 국립센터(CNFPT)와 파트너십을 체결
- 창작의 자유, 건축 및 문화유산에 관한 법안은 프랑스 건축, 도시계획, 환경 위원회(CAUE)에 선출된 의원들을 위한 교육 시행

국내 도입방안 :

- 공공건축 발주처로서 공공기관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서울시의 경우 도시공간개선단에서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하고 있으나, 아직 널리 확대되고 있지는 않음
- 건축 관련 공무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내용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연구 이후 관련 교육 운영 의무화 방안 마련, 또는 교육 수강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3.2.2 20세기, 21세기 건축 유산 고려 및 기존 건축의 가치 향상

- 지속가능한 개발, 건축과 문화유산 조화를 위하여 20세기와 21세기 건축유산을 고려하고자 함.
- (조치 6) 100년 이하의 건물들을 위한 새로운 인증표 구축
 - “창작의 자유, 건축 및 문화유산에 관한 법안”에서 “20세기 문화유산” 인증 외에 새로운 인증제도를 실시
 - 최근 건축된 프로젝트의 인증 절차 과정을 지원
 - 인증 받은 기존 건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의 경우, 소유주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국내 도입방안 :

- 국내의 경우 서울시는 미래유산 개념을 도입하여 20세기 문화유산에 대한 개념을 도입하고자 하였으나 지정 이후 실질적인 후속 대책이 없어 보존, 활용에 한계가 있음
- 문화재청과 함께 국가 차원에서 근현대 문화유산에 대한 목록 작성과 이에 대한 활용 방안, 주변 개발 시 연계 방안 마련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새로 지어지는 시설들 역시 앞으로 가치 있는 문화자산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품질관리가 필요함. 이를 위해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할 시설부터 현황 점검과 개선 방안에 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조치 7) 기존 건축물 개입에 관한 건축가 초기교육 및 지속교육 강화
 - 일상 건축물을 진단, 재개발하는 “DRAQ”과정(Havre대학과 노르망디 국립건축학교 석사과정)이나 특수 박사과정(Chaillot건축학교, Paris-Belleville 국립건축학교, Greboble국립건축학교)에 근거하여 교육 프로그램 설립

국내 도입방안 :

-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건축학교육인증과정에서도 리모델링을 중요 항목으로 다루고 있으며, 대학원 과정에서도 리모델링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으나, 별도의 학위 프로그램은 없는 상황임. (문화재 관련 제외)
- 프랑스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역사적 건물의 보존, 복원, 재생에 대한 별도의 학위, 또는 수료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문체부 산하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에서 근현대 건축물의 재생과 관련한 학위 프로그램 설치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조치 8) 건축물에 건축가의 이름 부착**

- 창작의 자유, 건축 및 문화유산에 관한 법률에서 건물을 설계한 건축가 이름과 건물 완공 날짜를 건물에 부착하도록 명시

국내 도입방안 :

- 건축가의 저작권은 건물 그 자체뿐만 아니라 2차 사용(사진, 광고, 영화 등)도 관련이 있어서 저작권의 범위, 내용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상황임
- 건축물의 기본 정보(건축물 대장 등)에 건축가 이름을 포함하도록 하며, 이를 쉽게 사람들이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문체부 뿐만 아니라 건축물 정보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 (국토부 산하)와도 협조가 필요함

• **(조치 9) 건축가의 도덕적 권리 가이드 배포**

- 건축가의 저작권 적용에 대한 저작권 가이드를 제작하여 배포
- 건축가(사) 협회는 다른 건축가가 설계한 건물에 개입하는 건축가들의 의무를 규정하는 직업윤리법을 현대화

국내 도입방안 :

- 조치 8의 사항과 연계하여 저작권에 관련된 연구의 결과물을 가이드 형태로 만들어 배포하도록 함

- (조치 10) 재개발 관계자들과의 함께 건축을 통한 우선지역 개발
 - 도시재개발 국가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문화통신부와 국가도시재생청(ANRU)의 협력 강화
 - 문화통신부는 국토위원회를 통해 건축, 도시 및 경관을 지역 진단에 포함하도록 연구를 실시하며, 건축과 문화유산국토서비스(STAP)와 문화지방청들을 연결

국내 도입방안 :

- 문체부 산하 문화예술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으로, 리모델링 과정에서 개별 건축물 증개축이 아니라 건축물, 주변 공공공간과 경관, 지역사회와의 종합적인 연계 고려가 필요한 상황임
- 이에 따라 리모델링 과정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 및 건축 관련 부서들과 협력하여 지역 차원에서 사전 연구 실시 및 마스터플랜 작성이 필요함

3.2.3 교육-연구-실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실무와 생활환경의 연계 강화

- 국립건축학교의 교육, 직업, 연구와의 연계 강화 전략이 필요
- (조치 11) 교육법에서 국립건축학교(ENSA)를 인정하고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기
 - 국립건축학교(ENSA)의 지위를 현대화, ENSA 교사의 지위를 연구교사의 지위로 전환
 - 창작의 자유, 건축 및 문화유산에 관한 법안은 ENSA의 임무를, 예술창작학교에 취해진 조처들과 같은 자격으로 교육법에 포함

국내 도입방안 :

- 문체부 산하 교육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건축교육 강화, 현재 건축과 는 미술원 내에 있으나, 이를 건축원으로 독립. 이후 국립건축학교 설립 추진
- 문화예술시설, 근현대 문화자산 등에 대한 특별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 (조치 12) 전국 차원에서 국립학교들의 역량 강화
 - 국립건축학교들은 대학 간 파트너십 개발, 전문 교육 훈련 강화 역할을 담당
 - 국립건축학교들은 프로젝트 관리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장소가 되도록 하며, 전문지식 및 공공정책 지원 역량을 개발

국내 도입방안 :

- 건축을 전공할 학생들뿐만 아니라 문화, 체육, 관광 시설 발주 및 관리, 운영을 담당할 공무원, 시민단체 및 관련 실무 담당자들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
- 먼저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관련 프로그램들을 시범적으로 실행하고 점차 확대

- (조치 13) 연구교수 사회적 지위 확립
 - 국립건축학교를 위한 연구교수 지위 신설

국내 도입방안 :

-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학교를 중심으로 앞으로 건축문화 증진을 위해 필요로 하는 특화된 분야 전문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
- 이러한 특화된 분야에는 근현대 문화유산 관리 및 개발, 지역사회 내에서 문화예술시설의 역할, 건축문화정책 개발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조치 14) 프랑스국가공인건축사(HMONP) 자격 평가 실시

- 프랑스국가공인건축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유럽연합 내에서 유효한 자격이 될 수 있도록 함

국내 도입방안 :

- 자격증 분야는 문체부에서 직접 관여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현재 국내에서는 건축사 자격 취득 후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
- 문체부는 한국예술종합학교와 함께 건축사 실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건축사들이 질 높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조치 15) 건축학교에 데모(demo) 건설현장, 인큐베이터, “팝업”(제작 실험실) 공동 작업공간인 “코워킹” 설치

- 젊은 예술가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젊은 건축가들을 위한 인큐베이터로서 국립건축학교들을 지속적으로 지원 (2015년 8개 학교 지원)

국내 도입방안 :

-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대한 교육 시설 확충
- 젊은 건축가들의 지원 정책 일환으로 소규모 노후 시설 리모델링을 통하여 젊은 건축가들의 창작지원시설 (업무 공간 및 제작지원실) 조성

• (조치 16) 2020년까지 건축회사들에 “100명의 박사학위 준비자” 고용

- 산학연계 차원에서 국립건축학교에서 진행되는 연구와 건축사무소에서 개발되는 혁신적 실무 지식과 접목
- 2020년까지 건축분야 박사학위 준비자 중 1/4을 학술연구교육산업협정, 연구세액공제, 프로젝트 융자 등을 통해 전문조직에 채용

국내 도입방안 :

- 국내의 경우 건설 기술 및 주택 분야를 제외하고 건축학 전공 박사학위자들이 취업할 수 있는 곳은 학교와 건축도시연구소 등에 국한되고 있어 그 기회가 매우 부족한 상황임
- 국내 설계사무소들은 대부분 실무 중심으로 연구 활동에 대한 여력이 없음
- 문체부 산하 건축 관련 연구소 신설, 국내 설계사무소에서 연구 활동 제안 및 연구 조직 구성 시 지원 프로그램 마련 검토

• (조치 17) 국립건축학교에서 연구파트너십 강좌 신설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주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국제연구교육팀을 조직하고, 다음 국가우선과제를 중심으로 국가프로젝트 개발
 - 건축의 순환경제, 특히 자재의 해체, 재사용 및 폐기물의 더 나은 관리
 - 21세기의 경제적이며 적합한 공영주택
 - 지속가능한 건물의 설계 및 구성요소
 - 20세기 문화유산의 새로운 사용 및 재개발
 - 지속가능한 도시와 건물의 기술 및 건축

국내 도입방안 :

- 문체부에서 건축문화 증진을 위한 주요 국가 차원의 건축 연구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연구 지원 체계 마련
- 지속가능한 문화유산으로서 건축과 도시라는 관점에서 근현대 건축유산, 지역거점시설로서 문화예술시설 관련 연구 등의 주제 등이 일차적으로 포함될 수 있음

3.2.4 건축역량 강화

- 건축 품질 향상을 위한 건축가 개입 확대, 건축 관련 기존 자원(정부서비스, 건축도시환경위원회(CAUE), 국립건축학교(ENSA), 협회 및 전문 네트워크 등) 활용 방안 마련
- (조치 18) 프랑스문화사업지방국(DRAC) 내에서 건축의 역할의 이해 향상
 - 각 지방문화사업부(DRAC)에 건축컨설턴트를 확보
 - 건축컨설턴트는 지방문화사업부(DRAC)와 함께 홍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건축도시환경위원회(CAUE), 건축사무소, 건축사, 조경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국내 도입방안 :

- 프랑스 문화사업지방국(DRAC)은 중앙정부 산하 지방 각 도시마다 있는 네트워크 조직으로 해당 지역 및 도시의 문화정책과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
- 국가,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최소 문화예술 관련 시설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건축 전문가들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
- 건축전문가들은 건축 교육, 홍보, 건축 연구, 건축 시설 조성과 관련 사업 기획, 연구 활동을 담당
- 이와 유사한 제도로써 서울시는 공공건축가 제도를 활용하여 공공시설 기획, 자문 과정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고 있음

- (조치 19) 프랑스 건축, 도시계획, 환경위원회(CAUE)의 역할 명시
 - 법적으로 CAUE의 역할 명시 및 확장
(창작의 자유, 건축 및 문화유산에 관한 법안)
 - ✓ “에너지 혁신의 국토 플랫폼”은 건축품질과 에너지성능을 결합시키는 혁신프로젝트를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프랑스 건축, 도시계획, 환경위원회(CAUE)의 활용을 권장
 - ✓ 건축, 도시계획, 환경위원회(CAUE)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개인컨설팅서비스가 건물 신축뿐만 아니라 건물 개축과 구획정리로까지 확대
 - ✓ 선출된 공무원 교육

국내 도입방안 :

- CAUE는 1977년 건축법 제정과 함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축문화 사업 기획 및 운영, 건축 행위 자문, 교육을 운영하는 지방 네트워크 조직

구분	내용	프로그램 운영 사례 (CAUE Paris 2011)
시민 참여 (SENSIBILISER)	• 공공토론 및 시민참여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작은 도시로부터 배우기 (일반과 전문가들이 특정 사업에 대한 소개 및 토론회) • 트램/센강 주변을 걸기 (답사)
일반 교육 (INFORMER /PEDAGOGIE)	• 시민 및 어린이, 청소년 대상 강연, 워크숍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집합적 도시 공간에 대한 공개 전문가 토론 • ATELIERS DE SENSIBILISATION • ATELIERS DE PARTICIPATION • LES ENFANTS DU PATRIMOINE • LES ARCHITECTES DANS LES CLASSES (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
자문 (CONSEILLER)	• 지역 커뮤니티나 민간을 대상으로 거주 공간 및 환경의 품질이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정보 제공	
트레이닝 (FORMER)	• 정치가 및 행정가들에게 지역개발에 대한 지식 제공 • 교사들에게 교육에 필요한 건축환경 및 자연환경에 지식 제공 • 전문가들을 위한 맞춤 교육 제공	• 정치가 및 전문가 교육- 세미나 (대도시 파리의 초상, 센 강과 대도시의 소통) • 교사 교육-워크숍 (도시 경험하기, 도시문화 찾기) • 지역 커뮤니티 교육(20지구) - 파리시의 운영, 파리시의 예산(지방 정부 담당), 20지구의 현재와 개발에 있어서 도전(CAUE 담당), 지역 탐험 (거주자, 자원자, 지역 공무원 등)

CAUE 운영 사례

출처: 서울 총괄건축가 도입 및 발주체계 개선 방안 마련, 서울특별시, 2014

- 국내 유사한 역할로서 서울시 서울건축포럼이 있으며, 시민 건축교육 프로그램 기획 운영, 건축 아카이브, 건축 정책 연구와 제안 등을 담당하고 있음
- 문체부에서 건축문화 연구 활동의 일환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교육 사업, 정책 연구 사업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조직 구성이 필요

• (조치 20) 분양토지의 개발 허가를 위한 건축가 개입을 통해 프랑스 내 건축품질 향상

- 건축과 도시 환경의 품질 개선을 위해 토지개발 기획단계에서부터 설계전문가와 함께 건축가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함.
- 창작의 자유, 건축 및 문화유산에 관한 법률을 통해 법적으로 위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국내 도입방안 :

- 문체부에서 발주하는 공간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건축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

• (조치 21) 건축가의 의무 개입 하한선을 150㎡로 하향

- 창작의 자유, 건축 및 문화유산에 관한 법률에서 건축가가 개입해야 하는 최소 기준 170㎡를 150㎡로 하향하여, 건축가가 소규모 개인주택 프로젝트에 많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함.

국내 도입방안 :

- 일반 허가 기준과 달리 문체부 발주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허가 기준 마련하여 건축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
- 현재 국내의 경우 교육청, 철도청, 국방부 등 시설에 대해서는 발주 기관 자체 별도의 허가 기준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음

- (조치 22) 의무개입 하한선 이하 개발에 대해 건축가가 개입할 경우 건축허가 획득 절차 단순화
 - 의무사용 면적보다 작은 경우에 건축가를 활용할 경우 건축허가 발급 기한 단축

국내 도입방안 :

- 조치 21과 연계하여 문체부 자체 허가제도 도입

3.2.5 건축의 경제적 가치 파악 및 업무 영역 확대 지원

- (조치 23) 건축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연구임무 시작

- “건축의 경제적, 물질적, 비물질적 가치”에 대해 문화통신부와 경제부의 협력 연구 진행
- 건축 가치사슬모형의 형성 및 “잘 지어진 건축물”의 기준에 관한 포괄적 측면 연구
- 지식서비스로서 설계의 가치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 건축의 가치를 결정짓는 요소들인 사용 적합성, 환경 고려, 지역과의 관계, 시대와의 적응, “잘 지어진 건축물”, 기술적 독창성, 건축물의 지속가능성 등의 기준 결정
- 건축적 개입으로 취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수량화

국내 도입방안 :

- 건설, 주택 분야 외에 건축 자체에 관련된 연구 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문체부는 건축문화와 관련된 전체 연구 로드맵 작성이 필요
- 건축문화를 위한 좋은 건축에 대한 정의와 기준,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술적 뒷받침 방향에 대한 연구 방향 수립
- 연구 방향에 따른 연구소 설립, 연구 활동 지원 체계 방안 마련 필요(조치 16 및 17과 연계)

- (조치 24) 공공계약에 대한 설계공모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절차에서 협상단계의 조건을 명시

- 유럽기준을 넘어서는 설계공모 기준 유지
- “창작의 자유, 건축 및 문화유산에 관한 법”에 따라 협상단계 정비
- 공공발주의 적절한 실행을 위한 사례와 지침을 확립

국내 도입방안 :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국내에서도 설계공모가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규모의 제한이 있음 (법 21조, 시행령 17조)
- 소규모 시설의 경우에도 가격 위주의 입찰 대신 설계 공모 확대, 소규모 시설인 경우 신생 설계사무소 대상의 공모 등을 운영하여 신생설계사무소 지원과 연계할 수 있음

- (조치 25) 신생 설계사무소들의 지원 및 세대 간 연계 촉진
 - 베니스건축비엔날레 프랑스관 참여 작가 선정 시 40세 미만 젊은 건축가를 포함하는 팀의 입후보 장려
 - 신생 설계사무소들을 위해 “추천” 제도 도입

국내 도입방안 :

- 신생설계사무소들 지원을 위하여, 작업 공간 지원(조치 15), 소규모 설계 기회 확대(조치 24)와 연계
- 국내외 신생설계사무소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 확대, 특히 ODA 사업의 경우 신생 설계사무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이와 함께 전시 및 홍보 사업을 병행하여 운영 (조치 28과 연계)

- (조치 26) 건축 BIM의 기반 구축

- 국립건축학교와 건축가(사) 협회를 중심으로 BIM 기반 구축

국내 도입방안 :

- 건축, 도시 관련 정보 구축 사업이 시작 단계에 있음.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공공건축, 공공공간 지도 작성 사업을 진행 중
- 문체부와 문화재청에서는 우선적으로 문화재, 근현대 문화유산, 문화체육관광부 관리 시설들을 대상으로 건축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 건축정보체계를 바탕으로 시설 관리, 리모델링 등을 효과적으로 기획, 관리할 수 있음

- 미래의 직업을 고안하기 위해 건축가 협회 지원 (조치 27)

- 건축가 협회를 중심으로 건축가들의 업무 변화 방안 및 새로운 업무 영역 개척 연구
- 건축가들의 지속적인 교육 체계 법제화
- 경제발전과 건축기업 조직화를 위한 활동 강화
- 직업 수행의 새로운 형태 강화(특히 단체 및 협회)
- 건축가들을 위한 훈련현장 개방 및 다양화
- 다른 설계 전문가들과의 협력관계 지속
- “진화하기 위한 평가”를 위해 품질 및 수량적 차원에서 공공 및 민간 건축

주문의 모니터링 시스템 확립

- 다양한 시장에서의 접근과 국제적 노하우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도구 개발

국내 도입방안 :

- 문체부는 우선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문화예술시설 기획, 관리, 운영 과정에서 건축가들과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협업에 대한 새로운 작업 방식을 실험하여, 문화예술공간의 품질을 올리는 시도를 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한 건축가들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건축가들의 업역이 다양화되고 확대될 수 있음

• (조치 28) 프랑스 건축의 해외 진출 지원

- 프랑스 건축의 수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건축수출 위원회(COMAREX)가 2015년에 창설, 2016년 로드맵에서 교육-활동부문 강화, 수요공급 분석, 지정학적 위치의 확인, 건축가들의 수출 준비 및 지원, 국제 주문 상호 접속 프로그램 개발을 명시
- 앵스티튜트 프랑세와 협력하여 프랑스 건축의 수출 지원

국내 도입방안 :

- 국내 건축가들이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루트 탐색이 먼저 선행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연구 후 가능한 지원 방향 탐색 필요
- 해외원조사업(ODA)의 경우, 건설뿐만 아니라 국내 건축가들의 참여를 강화하여 소프트웨어 측면을 부각하고, 참여 건축가들의 전시, 강연 등의 사업을 병행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속적으로 해외문화원 설립 및 관리,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설립 및 과정에서 공간적인 측면에서 기획 부분 강화가 필요

3.2.6 실험방식과 그 문화적 가치 지원

- (조치 29) 건축의 품질, 창작 및 혁신 촉진

- 창작의 자유, 건축 및 문화유산에 관한 법에 따라 건축 품질의 혁신, 또는 창작의 관점에서 공익을 위한 프로젝트일 경우, 도시계획 등 다양한 규제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함

국내 도입방안 :

- 조치 21, 22와 관련하여 현재 건축법에 따라 적용되는 일률적인 허가 제도가 아니라 문체부에서 발주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허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 필요

- (조치 30) « 실행 허가 » 실험

- 창작의 자유, 건축 및 문화유산에 관한 법안은 건축의 품질을 장려하기 위해 실험적으로 공공시설에 대해 일시적이고 한정적으로 건축에 관한 일부 규칙을 면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명시
- 사회적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주택 확장 및 변형, 지속가능한 건축 기술 및 기법, 기후문제를 고려한 보전건물의 재사용, 참여방식과 자기건설 등과 같은 주요사회문제 관련 프로젝트들에 적용

국내 도입방안 :

- 조치 29에 이어 문체부 산하 시설 중에서도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기획 및 발주 방법, 허가 등 실행 과정 전체를 실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 보완 필요

3.3 실행사업들의 주요 시사점

1) 6개 전략의 목표 및 실행조치 도입 방향

- 건축문화에 대한 일반 관심 제고
 - 건축문화 홍보, 일반 및 건축관계자 교육 방안 마련
- 기존 건축자산과 환경의 품질 향상
 - 근현대 건축자산 보전을 위한 인증제도 도입
 - 리모델링을 위한 교육 및 연구, 실험 강화
 - 기존 자산의 건축가들에 대한 존중 방안 마련
- 건축 교육과 연구, 실무 경쟁력 강화
 - 국립건축학교의 위상,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 건축사무소에 연구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 건축사 자격증의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 건축 품질 향상을 위한 법제 및 조직 강화
 - 건축전담 기관의 역할 강화
 - 건축가 개입 확대를 위한 건축 인허가 제도 개선
- 건축의 가치 확장
 - 건축의 새로운 가치 발굴 및 업역 확대
 - 공공발주제도 개선
 - 신진 설계사무소 지원, 해외 진출 지원
 - BIM 기반 구축
- 건축 실험을 위한 제도 마련
 - 실험적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제 완화 기회 제공

2) 국내도입 방향

- 6개의 목표 및 전략은 현재 국내에서도 충분히 의미가 있음.
 - 기존 건축문화 진흥과 관련된 연구 문헌 및 2장에서 다룬 현황과 비교할 때 6개의 목표 및 전략은 국내에서도 적용 가능함.
 - 프랑스와 비교할 때, 국내 일반 국민들의 건축에 대한 관심은 더욱 낮은 편이며 발주자를 비롯한 건축 관계자들의 건축문화에 대한 인식 마찬가지임.

- 역사문화도시에 대한 관심 향상에 따라 기존 건축자산 보전 및 활용 사례가 국내에서도 점차 늘어나고 있음. 이를 위한 교육 및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 국내 건축교육은 5년제 도입 이후 질적으로 향상되고 있지만, 교육내용의 다양화 등에 있어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연구 영역 역시 건설 쪽 영역에 치중되어 있는 만큼 설계 분야에 있어서 연구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함.
- 건축품질 향상을 위한 법제 향상 관련하여 아직 국내는 프랑스와 같은 전담 기관이 없는 상황임.
- 신진 건축가들이 활동하기 위한 업역의 확대와 새로운 가치 창출은 국내에서도 매우 시급한 주제임.
- 실행조치 세부 사업에 있어서는 국내 상황에 맞도록 조절이 필요함.
 - 건축가의 개입 확대를 위하여 전체적인 건축 허가 부분을 손대는 것은 어려운 부분으로, 다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공연법 등 등록이 필요한 건축물에 한해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 모색 필요
 - 프랑스문화사업지방국, 프랑스 건축도시계획환경위원회와 같은 전담 조직이 부재한 상황에서 국내 법제에 맞는 적절한 건축문화 기관이나 조직 구성 방향 마련이 필요
 - 국립건축학교가 없는 만큼 일차적으로 문체부 산하 교육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시범 케이스로 건축문화 및 연구 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일반 대학의 건축학과들의 경우 교육 프로그램 제공이나 지원을 하는 것이 적합함.

4.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4.1 정책방향과 실행사업

4.1.1 정책방향과 실행사업 도출 방안

표 4-1 국내 현황 문제점과 실행사업 도출

국내 현황 개선점		주요 개선 방향	사업 전략	
건축기본법 활성화 방안 마련	실행수단 현실화 방안 부족	- 건축에 대한 관심 증가를 통하여 중요성 인식	- 건축기본계획에 제시된 건축문화 홍보, 일반인 및 관계자 교육 사업 강화 - 건축문화진흥 기관으로서 건축정보센터 마련	건축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 실행사업 부서들 간 협조 체계 구축	- 책임 전담 부서 설치 - 건축문화위원회 설치 - 문화예술공간 프로젝트 발주 방안 개선 제시	건축 역량강화
문화예술 공간 조성 사업 개선 방안 마련	기능적인 시설로만 접근	- 기획 단계 강화, 통합기획체계 마련 - 문화예술공간 허가 및 관리 체계 마련 - 기존 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업그레이드	- 문화예술공간 건축정보체계구축 - 기존 지역문화예술 시설 질적 업그레이드 방향 마련 - 주민 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간 확대	건축문화 확산, 환경 개선
	질적인 성장 필요			
	기획 단계 부재			
	공공디자인과 통합 필요			
문화재를 중심으로 하는 근현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성화 전략 마련	경직된 보존 중심의 문화재 관리체계 개선	- 문화재를 거점으로 하는 지역공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건축문화예술 융합사업 방향 모색 - 건축가들에게 새로운 실험 기회 제공 - 국가건축실험프로젝트 제안	미래를 선도하는 건축
	한정된 근현대 문화유산 보존 관리 체계 개선	- 비지정 근현대 건축자산 보존 및 활용 방안 마련		
건축 전문교육 및 인력활용 개선 방안 마련	신진 건축가 지원 방안 마련	- 건축문화 전문 교육 및 연구 기관 설립 (한국예술종합학교와 연계) - 인증제와 병행 가능한 건축교육 프로그램 개발 - 신진건축가 지원 프로그램 마련 - 건축가의 업역 확대 및 건축가의 위상 확립	-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원 설립 - 대학 건축교육 특성화프로그램 마련 - 건축문화 연구 지원 프로그램 마련 - 신진건축가 지원 프로그램 마련	건축문화 심화를 위한 건축교육과 연구 강화
	건축교육 다양화 방안 마련		- 건축저작권 연구 및 개선 - 건축가들의 해외 진출 지원 (ODA 사업 연계) - 제3세계 건축가들과 교류 기회 확대 - 해외 문화원 건축 관리	건축의 경제적 효과 증대
	공학 위주의 교육 및 연구 탈피			

4.1.2 6가지 정책방향과 21가지 실행사업

표 4-2 6가지 정책방향과 21가지 실행사업 목록

정책방향	실행사업
A 건축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01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활성화 방안 마련
	02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건축문화 관련 콘텐츠 개발
	03 발주처 및 행정담당자 대상 건축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04 건축문화정보센터 설립 운영
B 건축문화 확산, 환경개선	05 문화예술공간 건축정보체계 구축
	06 기존 지역문화시설 활성화 리모델링
	07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간 확대
C 건축문화 심화를 위한 건축교육과 연구강화	08 대학 건축학과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09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원 설립
	10 건축문화 연구 주제 발굴 및 연구 활동 지원 체계 마련
	11 '젊은건축가' 및 '역량있는 건축사' 지원 프로그램 확대
	12 신진 건축가 창업지원
D 건축 역량강화	13 건축문화위원회 신설
	14 문화예술공간 프로젝트 발주방식 개선 제시
	15 건축문화 전담 행정조직 구성
E 건축의 경제효과 증대	16 건축저작권의 강화
	17 ODA사업과 연계한 건축가들의 해외 진출방안 모색
	18 제3세계 해외건축교류 프로그램
	19 해외 문화원, 공관 등 해외 건축물의 공간관리, 건축가 지원 프로그램 마련
F 미래를 선도하는 건축	20 건축과 여러 예술 분야와 협력
	21 국가건축실험 프로젝트 제안

4.1.3 21가지 실행사업 예상 로드맵

표 4-3 단계별 실행사업 목록

가. 초기 추진 실행사업 : 정책 시행 1년 이내 추진

- 01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활성화 방안 마련
 - 02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건축문화 관련 콘텐츠 개발
 - 03 발주처 및 행정담당자 대상 건축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04 건축문화정보센터 설립 운영
 - 05 문화예술공간 건축정보체계 구축
 - 10 건축문화 연구 주제 발굴 및 연구 활동 지원 체계 마련
 - 11 '젊은건축가' 및 '역량있는 건축사' 지원 프로그램 확대
 - 13 건축문화위원회 신설
 - 14 문화예술공간 프로젝트 발주방식 개선 제시
-

나. 중기 추진 실행사업 : 정책 시행 1년~3년 이내 추진

- 06 기존 지역문화시설 활성화 리모델링
 - 07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간 확대
 - 08 대학 건축학과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 12 신진 건축가 창업지원
 - 16 건축저작권의 강화
 - 19 해외문화원, 공관 등 해외건축물의 공간관리, 건축가지원프로그램 마련
-

다. 장기 추진 실행사업 : 정책시행 1년~5년 이내 추진

- 09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원 설립
 - 15 건축문화 전담 행정조직 구성
 - 17 ODA사업과 연계한 건축가들의 해외 진출방안 모색
 - 18 제3세계 해외건축교류 프로그램
 - 20 건축과 여러 예술 분야와 협력
 - 21 국가건축실험 프로젝트 제안
-

4.2 실행사업 내용

4.2.1. 건축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실행사업 01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활성화 방안 마련

가. 현황과 문제점

- 현재 대한민국 건축문화제는 건축상 수상작 전시, 학생공모전 전시 등 작품 전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 건축가, 건축학과 대학생 등의 전문가들의 잔치로 자리 잡은 대한민국 건축문화제는 일반인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는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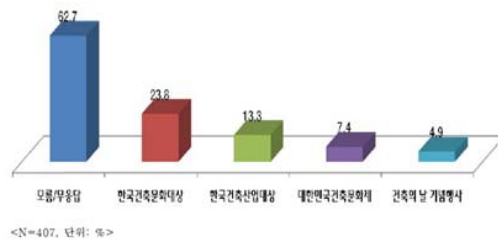


그림 4-1 정부/단체 주관 건축문화 행사에 대한 일반인의 인지도
출처: 건축문화 관련 행사 통합 강화 방안, 국토부, 2010

- 일반인들의 건축적 관심은 아파트 분양을 위한 전시관, 대규모 상업건물의 홍보, 광고매체를 통한 건설관련 내용, 방송매체의 흥미위주의 집 고치기 등으로 왜곡되어 있어 모든 국민에 대한 건축문화에 대한 오해를 개선하고 긍정적 관심을 고취하는 데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
- 대한민국 건축문화제는 국내에서 건축을 문화·예술적으로 접할 수 있는 가장 큰 행사이고 좋은 기회이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인지도를 높여 건축의 문화·예술적 가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나. 개선방안

- 대한민국 건축문화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소규모 행사들을 연계하여 풍성한 건축문화 축제를 기획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개최기간을 전후로 하여 초중고교 및 대학교를 중심으로 건축교육 프로그램 운영, '건축문화 주간' 설정
 - 지역 문화예술공간을 중심으로 지역 건축 답사 및 교육 프로그램, 지역 건축

전시를 개최

-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관련한 보편적인 주제를 설정하고 대담, 강연, 공개답사 등을 통해 건축계 내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이슈가 되고 있는 건축 관련 정책이나 새로 지어지는 건축물 등 대중과 눈높이를 같이 할 수 있는 교육, 설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올해의 건축문화 키워드’를 정해 집중적으로 대중이 알고 싶어 하는 건축해설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방송과의 연계를 통한 대중적 건축문화 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전문적인 운영주체 선정이 필요하며, 풍성한 건축문화 축제가 되도록 프로그램 기획, 개발을 위한 충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한다.
- UIA 2017 서울세계건축대회를 기점으로 획기적인 건축문화 이해를 높이는 연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그림 4-2 세계건축문화 행사 포스터 (서울, 바르셀로나, 싱가포르)

실행사업 02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뤄야 할 건축문화 관련 콘텐츠 개발

가. 현황과 문제점

- 건축문화는 건축가라는 전문가만의 몫이 아니라 전 국민이 주체가 되어야 국가 전체의 건축문화의 수준을 높이고 이를 통한 국민행복권 추구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
- 우리나라의 건축교육은 전문 교육인 대학과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며, 건축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체 교육과정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삶과 환경에 건축문화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스스로 건축문화의 가치를 찾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도시/지역공간/건축에 대한 문화적 인식과 창의성은 그 사회 전체의 사회적 문화자본이며, 사회적 환경에 의해 배양되고 시간적으로 축적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개인적, 사회적 성장과정에서 학습되고 체화되어야 한다.
- 건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건축의 중요성에 대한 인문적 접근이 없는 상태에서 건축은 시설과 부동산으로만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며, 건축을 문화의 하나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교육방법개발이 필요하다.

나. 개선방안

- 초·중·고등학교 교육현실을 고려하여, 세계건축가연맹(UIA)의 <건조환경교육에 관한 지침서>⁸⁾가 권장하는 최소 60시간 이상의 체계적인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한다.
- 문체부와 교육부, 건축문화관련 단체와 연구소가 연대하여 건축문화 선진국의 사례를 본받아 장기적인 ‘평생건축문화교육’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한다.



그림 4-3 어린이 건축교실 프로그램 사례
어린이 건축학교, “꾸미고 꿈꾸는 화장실 만들기” 프로젝트

8) UIA, UIA Built Environment Education Guidelines, April 2002.

실행사업 03 발주처 및 행정담당자 대상 건축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가. 현황과 문제점

- 건축의 생산은 건축주, 건축가, 시공자의 세 주체의 참여로 이루어지며, 건축문화는 세 주체의 제대로 된 역할을 통하여 구축될 수 있다. 건축가와 시공자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높아졌으나, 건축주, 발주처의 전문성 부족 문제는 상대적으로 적게 다뤄지고 있는 현실이다.
- 건축문화를 정립하기 위하여 설계에 참여하는 건축가들의 역량뿐만 아니라, 발주처의 건축문화에 대한 소양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네덜란드의 아키텍처 로칼, 프랑스의 CAUE 등에서는 공공발주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물론, 민간 발주자를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을 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에서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건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건축관련 업무 담당자뿐만 아니라 정책 입안, 예산 기획, 사업 발주 등을 담당하는 행정담당자까지 건축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건축문화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나. 개선방안

- 건축문화정보센터(사업 04) 및 건축문화연구지원 프로그램(사업 10)과 연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 방안을 만들어 시행한다.
- 각 프로젝트 기획 또는 발주 전 단계에서부터 총괄건축가 또는 건축전문가와 의 교육 및 협업을 의무화하는 프로그램을 구축한다.
- 기존 발주 사업에서 예산 집행 과정에서 사업 완수까지의 프로젝트 프로세스를 리뷰하고 연구하여 좋은 사례, 나쁜 사례를 모아 교육자료로 활용한다.
- 관련공무원들이 건축실무의 경험을 바탕으로 포괄적인 건축문화 구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매년 상황을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실행사업 04 건축문화정보센터 설립 운영

가. 현황과 문제점

- 현재 각 부처별로 공공시설, 문화시설을 정해진 프로그램으로만 활용하고 있어 공공·문화시설의 건축·문화적 측면에서의 정보 제공, 홍보, 교육이 전무한 상황이다.
- 건축결과물의 활용에 초점을 둔 정보 제공보다는 발주, 공모, 설계, 시공, 운영, 관리 등 건축의 전체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건축전문가, 행정가들이 실무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지역주민과 건축전문가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나. 개선방안

- 현재 추진 중인 세종시 건축박물관을 중심으로 중앙 관리 기관(센터)을 설립하여, 건축 결과물뿐만 아니라, 발주, 공모, 설계, 시공, 관리 등 건축과정의 정보 전반에 대한 아카이브 자료 시스템을 구축, 운영 관리한다.
- 건축전문가들에게는 국내외 건축과 관련된 전문정보와 동향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유사 건축물 기획 시 참고 자료로 활용 하며, 일반 시민들에게는 공공·문화 시설 정보 전달, 홍보 및 상담 창구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축 교육 프로그램을 온·오프라인으로 운영하고, 중앙 관리 센터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생활밀착형 문화공간(사업 07)과 연계하여 오프라인에서 지역문화시설의 생활 접근성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한다.



그림 4-4 해외 건축박물관 사례
독일 건축박물관 (프랑크푸르트)과 프랑스 건축박물관 (파리)

4.2.2 건축문화 확산, 환경개선

실행사업 05 문화예술공간 건축정보체계 구축

가. 현황과 문제점

- 문체부에서 관리하는 건축물들의 기초자료는 물량적인 수치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자료 분석에 한계가 있다.
- 국가 건축행정시스템이 제공하는 건축물 정보는 일반적인 자료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각 시설의 세부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다
- 현재 시행하고 있는 BIM자료도 건설현장 중심의 자료이기 때문에 문화예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해석틀로 다시 가공하여 자료를 추출할 필요가 있다.

나. 개선방안

-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문화예술시설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물을 아카이브로 구축한다.
-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서 해당 건축물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과 통계 정보 정리에 대한 연구가 선행해야 하며, 아카이브 데이터는 건축물의 정보(건립시기, 규모, 건축가 정보와 도면 등), 도시적 맥락(시설 주변의 공공공간 현황, 공공디자인 등) 뿐만 아니라 문화 자산 현황, 운영 프로그램, 이용 현황 등을 포함하는 물리적인 환경과 지역, 문화적 환경에 대한 포괄적 정보체계로 구축한다.
- 전수 조사 결과물은 추후 해당 시설 리모델링 및 주변 문화예술, 체육, 관광 시설 계획 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
-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축허가 행정의 디지털자료 구축과 연계할 필요가 있으며 BIM 자료 구축에 대한 제도마련 등의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림 4-5 세움터 웹페이지



그림 4-6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실행사업 06 기존 지역문화시설 활성화 리모델링

가. 현황과 문제점

- 2016년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따르면 국립도서관(1), 공공도서관(978), 박물관(826), 미술관(219), 문예회관(229), 지방문화원(228), 문화의집(114) 등이 구성되어 있으며, 문화예술회관의 경우 전국 군 단위까지 조성이 완료되어 있어서 양적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져 있다.
- 많은 수의 문화예술시설이 주변 공공공간과 유리되어 있어 시민접근성이 좋지 않으며, 디자인에 있어서도 권위적인 모습을 하고 있어서, 리모델링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될 필요가 있다.
- 지역 문화산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역의 문화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적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다.

나. 개선방안

- 문체부 산하 건축물 전수 조사(사업 05)를 기반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설 리스트를 단계별로 작성한다.
- 건축물의 낙후 정도뿐만 아니라 이용 현황, 지역민들의 접근성, 지역 경관 등을 고려하여 리모델링의 방향을 결정하되, 시설과 공간에 대하여 일괄적인 접근이 아니라 개별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 개별 시설별 리모델링 방향 설정 시 지역 단위의 문화예술공간 조성 전략 마스터플랜을 동시에 수립한다. 지역 단위에서 문화예술, 체육, 관광 시설들의 중복 또는 필수 기능 부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설들 간의 연계성을 고려하며, 공공디자인과 통합, 연계하여 진행한다.
- 리모델링 과정에서 시설과 운영 프로그램 통합 기획, 발주 제도를 도입하며 사전 기획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건축가 그룹을 활용한다.(사업 15) 또한 발주 방식에 있어서도 조달청 발주 방식이 아니라 설계 공모를 적극 활용한다.
- 매년 관련 통계를 통하여 지역문화시설의 실태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며, 문화예술공간 건축정보체계(사업 05)에 정기적으로 업그레이드 한다.

실행사업 07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간 확대

가. 현황과 문제점

- 지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려는 요구가 증대하고 있지만 지역 사회에서 이를 충족할 문화공간은 부족한 현실이다.
-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활문화센터, 작은 도서관 등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은 소기의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사업 기획과 공간을 조성하는 과정에는 다소 미흡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이 정형화되고 형식적이며 물량중심적인 접근에 머무를 수 있으므로 작은 규모의 다양하고 생활과 밀착된 지역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근원적인 처방이 필요한 상황이다.

나. 개선방안

- 주민 스스로가 문화소비자에서 문화생산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해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부터 주민 참여제도를 도입한다.
- 기획 단계에서 프로그램 기획과 시설 기획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전문가 그룹을 조직하여 파견 지원한다.
- 단순한 시설 개선뿐만 아니라 시설 바깥의 도시적 맥락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사회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다.
- 문화적으로 낙후된 곳을 중심으로 하는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 후 장기적인 로드맵으로 점차 확대해 나간다.
- 시설 조성을 위한 예산 지원과 함께 운영비 보조 형식을 넘어 운영 프로그램 및 공간의 기획 인력을 지원한다.
- 이미 존재하는 지역 건축자산을 재활용한 건축문화 창조 가능성에 주목한다.



그림 4-7 소규모 생활문화공간 사례
(성주 금수문화예술마을과 도봉구 도깨비 연방)

4.2.3. 건축문화 심화를 위한 건축교육과 건축연구 강화

실행사업 08 대학 건축학과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가. 현황과 문제점

- 건축학교육 인증이 도입되면서 전체적인 교과과정 구성은 국제적 수준에 맞춘 틀이 잡혀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인증의 양적 기준에 초점을 맞추면서 전체적인 교육 내용이 획일화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최근 대학의 취업난과 함께 모든 학생들이 학점에 집중하게 되어, 건축학과와 다양한 경험과 시도가 부족해지고 있다. 또한 모두 국내의 현실적 상황만을 따라가고 있는 실정으로 판단된다.
- 과거와 달리 사회의 선배들과 교류가 약해지면서 각 대학이 사회와의 연계성이 작아지고 있다. 대학이 사회와 분리되어 가는 상황이다.
- 여기에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위하여 세부 프로그램들을 개발 운영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세부 프로그램 운영에서는 건축문화예술을 지향하는 관점의 협의 조정 및 지원을 위한 중앙부처 차원의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나. 개선방안

- 실험적인 설계스튜디오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설계 스튜디오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주제 선정 및 운영에 있어서 좋은 교과목 프로그램을 제안할 경우, 이에 대해 지원하고, 문제부 차원의 주제를 제공하여 이에 발맞출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 설계수업뿐만 아니라 건축의 기획, 설계와 다양한 영역의 기술을 결합하는 등 건축의 업역을 확장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한다.
- 각 대학별로 시행 중인 국제교환학생 제도를 문제부에서 ‘단기 국비유학생’ 선발 등의 제도로 지원한다. 각 대학에서 시행 중인 설계사무소 현장실습에 대하여 전 세계 유명 건축가사무소를 대상으로 문제부 주최의 선발, 여비, 체재비 등의 지원을 시행한다.
- 신진건축가의 설계사무소 또는 교육인력풀 사무실과 학생실습 연계하여 신진건축가의 설계사무소 지원과 함께 학생들의 현장경험 기회를 확대한다.
- 각종 건축상, 젊은건축가상 수상자들을 중심으로 여름건축학교, 건축가 토크 콘서트 등 특별 프로그램을 대학에서 운영하거나 지원한다. 이를 통해 각급 대학은 건축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창의적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다.

실행사업 09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원 설립

가. 현황과 문제점

-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건축과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유일한 국립대학 건축교육기관으로서 건축교육 및 연구에 있어서 실험적인 시도들을 할 수 있도록 제반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입학정원이 10여명에 불과한 소규모 교육기관에 머물러 있어 보다 집중적이고 역량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 연구중심의 건축교육을 전담할 학교가 부족하다. 특히 기술과 엔지니어링 분야 외 건축분야의 연구 전문학교는 매우 부족하며, 연구된 내용을 실험할 조직도 없는 형편이다.
- 프랑스 국가건축전략보고서가 시사하고 있듯 건축문화의 발전은 민간의 노력만으로 성취되기 어려운 영역이며 국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
- 우리나라 70여개 대학교 건축학과는 외국과 비교하여 과다한 중복투자, 경쟁력이 부족한 소규모 학과운영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나. 개선방안

- 국외 최고수준의 건축대학과 비견될 수 있는 규모로 강화하여 건축문화 선도 교육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축원의 설립이 필요하다.
-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학과 대학원을 전문분야의 건축교육과 정책과제를 다루는 연구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화한다.
- 대학원은 건축과 도시의 지속가능성, 건축문화정책, 근현대건축유산을 포함하는 건축문화 전반에 대한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다룰 수 있다. 또한 문제부에서 추진하는 건축문화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정책연구를 수행한다.

실행사업 10 건축문화 연구 주제 발굴 및 연구 활동 지원 체계 마련

가. 현황과 문제점

- 문화예술공간 조성 기획 사업을 비롯하여 다수의 공간환경조성사업 기획 업무 등이 단발성 용역으로 진행되거나, 전문성이 결여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에서 진행하고 있다.
- 단발성 용역으로 진행되는 경우 연구 결과의 축적이 어려우며, 건축문화와 관련된 수준 높고 일관된 연구성과 도출에 한계가 있으며, 미래의 가치 추구에 매우 불합리하다.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내 건축 전문가 그룹이 존재하지 않아 건축과 관련된 연구 진행에 한계가 있다.
- 현재 건축문화와 관련된 연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곳은 국토교통부 산하 건축도시연구소밖에 없으며, 국토부 발주 연구의 범위는 건축문화와 관련된 영역이 매우 제한적이며, 건축문화 관련 전문 연구자가 전무하다.

나. 개선방안

- 실무 건축가들이 건축문화 진흥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자 할 경우 이에 대한 지원 체계가 없으므로 관련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 건축문화 연구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한다.
- 현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내 건축문화 연구를 담당하는 조직을 설립한다. 이 연구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문체부에서 조성하는 주요 시설에 관련된 기획 업무 연구 담당
 - 문화재 주변 정비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마스터플랜 작성 등 업무 연구 활동 담당
- 국립예술종합학교 건축학과의 대학원 과정을 강화하여 건축문화관련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건축가 및 건축연구자 연구 지원 프로그램 운영한다.
 - 설계사무실을 운영하는 건축가, 대학의 건축학과 교수 및 독립 건축 연구자가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연구 기획서를 제안할 경우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연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 건축문화 관련 연구에는 건축 품질을 올리기 위한 제도개선 및 기술개발, 건축문화 홍보를 위한 프로그램 및 콘텐츠 기획 및 운영, 건축문화자산 발굴 등을 포함

실행사업 11 ‘젊은건축가’ 및 ‘역량 있는 건축사’ 지원 프로그램 확대

가. 현황과 문제점

- 젊은건축가상은 2003년에 시작된 신인건축사에 이어 2008년부터 매년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수상자에 대한 작품전시회, 작품집 제작, 온라인 홍보 등을 하고 있으나,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여 수상자들에게 중견 건축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 역량 있는 건축사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11조에 정의되어 있으나, 그 정의가 중앙정부에서 공모하거나 해외에서 공모한 설계경기에 입상한 건축사로 제한하고 있고, 이는 이미 자리 잡은 건축조직에 속한 건축가를 대상으로 기회가 주어지는 형식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나. 개선방안

- 젊은건축가상 수상자들에게는 크지 않은 규모의 설계용역 프로젝트를 일정 기간 동안(선정 후 2년간) 1년에 2개 이하 정도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며, 문체부 해외 전시나 행사 때 동행하여 전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역량 있는 건축사는 문체부에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11조를 받아 보다 구체적인 조건과 선정방법을 명시하여, 밀도 있는 건축 관련 설계와 자문을 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국내 건축문화와 품질의 선진화를 가속할 수 있는 역할이 주어져야 한다.
- 이들 건축가를 문체부 공공건축가 풀(pool)로 활용할 수 있으며, 건축에 대한 시민교육과 홍보를 전담할 수 있고, 다양한 국내외 건축문화행사 및 유관분야와의 협력이 가능하게 한다.



그림 4-8 젊은건축가상 전시와 젊은건축가포럼 포스터

실행사업 12 신진 건축가 창업지원

가. 현황과 문제점

- 건축 교육을 받은 신진건축가들의 활동 확대를 위하여 우리 사회에서 역할을 시작하기 위한 배려와 업무 영역 확대가 필요하지만, 실제로 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프로젝트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 다른 문화예술분야의 작가, 예술가들의 창작을 지원하기 위한 예술가지원사업, 아티스트 레지던스 사업 등과 같은 지원을 문화예술분야의 한 부분으로서 건축에도 적용 하는 것이 필요하다.
- 건물을 설계하는 일 외에 총체적인 공간환경의 기획 및 설계 분야에 건축가들의 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개선방안

- 공공영역의 다양한 유휴 공간을 신진건축가들을 위한 업무 공간으로 확보하고 다양한 공용비품을 비치하며, 일정 기간 무료 또는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활용하도록 제공한다.



그림 4-9 서울시 디지털대장간 포스터와 실내

- 이러한 장소는 산학연계를 터전으로 건축학과 재학생들의 취업의 기회를 확대하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반 지원체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 신진건축가 대상 설계공모 활성화를 통하여 우리사회 전반에서 미래를 이끌어갈 유능한 건축문화인재를 육성하는 시스템으로 활용하게 한다.
- 젊은건축가, 신진건축가들의 아이디어와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특히 문체부 사업 중 일부를 할당하여 적극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다.

4.2.4 건축 역량 강화

실행사업 13 건축문화위원회 신설

가. 현황과 문제점

- 건축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개인들의 전문적 지식 외에 이를 지원하고 견제하며, 사회의 통념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건축법에 따른 제도 외 전무하다. 따라서 건축문화적 접근보다는 기술적 접근과 행정적 단순 해결을 위한 내용에 그치고 있다.
- 문체부에서 건축문화와 관련된 업무의 방향을 논의하고, 조율할 수 있는 민관합동의 위원회가 필요하다. 건축의 사회적, 공공적 가치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개인적 의견과 실력보다는 집단지성이 표출되는 의미 있는 위원회가 필요하다.

나. 개선방안

- 문화예술의 하나인 건축문화를 증진하기 위해서 문체부는 건축문화위원회를 설치한다. 단순한 시설의 개선이 아니라 건축문화 전반에 대한 미래 비전을 수립하고 대중과 소통하는 아젠다를 발굴하여 실효성 있는 건축문화 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한다.
- 건축문화위원회는 문화예술공간, 체육시설, 관광시설과 건축문화제 등의 문체부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담당하고 위원회 위촉의 대표건축가, 사안별로 위촉된 건축가와 위촉 건축가 그룹을 선정,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 궁극적으로는 국가건축문화 정책을 결정하는 의결기구가 될 필요가 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건축문화 증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가건축정책위원회나 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 사례에서 보듯이 건축문화위원회가 실효성 있는 의결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실행력이 있는 행정부서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실행사업 14 문화예술공간 프로젝트 발주방식 개선 제시

가. 현황과 문제점

- 문체부 시설 조성 사업들은 예산을 편성하고 기존의 관행에 따라 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기획, 설계발주단계에서 시공, 운영단계까지 전 과정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주방식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
- 건축의 발주는 국토부 책임의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을 기초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과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운영보다는 개선되었으나, 아직 건축문화의 의미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발주방식이라 하기 어렵다.
- 특히 문체부에서 발주하게 될, 다양한 문화관련시설은 건축문화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국제적 수준의 발주방식의 적용이 필요하다.

나. 개선방안

- 문화예술시설, 체육시설, 관광시설은 도시환경, 건축과 조경, 공공디자인이 결합되는 종합시설일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콘텐츠가 반영된 운영프로그램에 따라 다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시설임을 감안한 발주방식이 적용되어야 한다.
- 조성 사업들을 발주, 관리하는 전담부서와 담당으로 위촉된 건축가를 위한 전문적인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 교육부의 교육시설, 국방부의 군사시설, 철도공사의 철도시설, 법무부의 교정시설과 각 청사 등은 건축법에 의하지 않고 독자적인 인허가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문체부의 시설들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독자적인 발주 및 인허가 체계를 갖춰 건축문화 선도사업의 결과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공연법 등에 적용되고, 문체부 장관과 시도시지사 등록이 필요한 문화예술관련 시설의 경우, 적극적으로 건축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독립적인 인허가 체계를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

실행사업 15 건축문화 전담 행정조직 구성

가. 현황과 문제점

- 현재 문체부의 시각예술디자인과에서 공공디자인, 공간환경 관련사업을 시각 예술분야와 함께 다루고 있다. 문체부에서 추진하는 건축문화 관련 업무는 시각디자인과의 업무를 확장한 형식으로, 독립된 전담부서 설치가 바람직하다.
- 국토부 건축문화경관과의 업무는 경관, 건축사관리,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과 관련되어 있으며, 건축문화예술 진흥과 직접 연관된 업무는 극히 제한적이다.
- 문화관련시설, 국가문화환경조성을 지향하는 건축문화 관련사업은 이미 문체부에서 추진, 관리되고 있다. 우선적으로 이를 대상으로 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체계적인 건축문화 정책을 새롭게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하여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전체의 건축문화 관련 업무를 국토해양부 및 모든 부처와 협의, 조정하여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나. 개선방안

- 문체부의 각 부서별로 발주하는 건축문화관련 사업의 기획, 발주 관리의 업무를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여 일관된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내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관 산하에 건축문화 관련 전담 부서를 설치할 경우 주요 담당 업무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 문체부 산하 건축물의 기획, 발주 관련 사업 총괄
 - 건축문화위원회와 위촉된 대표건축가, 사안별로 위촉된 건축가 등에 대한 업무
 - 건축문화 연구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건축교육, 홍보, 신진건축가 지원, 건축문화 해외교류 프로그램 관련 부처협의 및 운영
 - 문화재청과 역사문화공간 조성 관련 사업 조율. 즉 주요건축물의 근대문화유산 정착과 주변 도시환경에 대한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4.2.5. 건축의 경제효과 증대

실행사업 16 건축저작권의 강화

가. 현황과 문제점

- 국내 저작권법은 건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교육, 실무, 발주 등 업무에서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른 민간과 공공기관의 건축 관련 저작권법 위반은 문제의식 없이 벌어지고 있다.
- 특히 저작의 범위가 모호하고, 설계에 참여하였다고 무조건 저작을 인정받는 것도 아니며, 건축주와 발주처도 자신들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는 국내 건축문화를 전문성이 결여되게 만들고, 건축문화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 건축물의 생산과정에서도 저작권법은 전혀 무시되고 있다. 생산과정의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가 없으며, 저작권법은 문체부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 개선방안

- 건축가들의 업무 중 설계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것임을 건축가들도 자각하도록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며, 건축주와 발주처도 이를 잘 깨닫도록 만드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공모 등 발주 시, 관련 저작권은 저작권법 적용의 문구를 의무화 하고, 발주처의 요청 등 단편적 사항은 저작물이 아님을 교육하여야 한다.
- 저작권이 있는 유사분야 중 음악, 영화 등의 산업화된 분야의 저작권 활용 방안과 건축분야에 대한 해외사례를 연구하고, 이에 대해 건축 저작권의 고유한 특성과 나아갈 방향, 전략, 법제화 가능성 등을 연구하여 적용해야 한다.
- 저작권 위원회에 건축분야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충하여 건축저작권 관련 업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문화재청과 공조하여 등록된 문화재의 저작권에 대해 표시방법과 홍보방안을 마련토록 한다. 특히 근현대문화재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소개와 함께 저작자의 소개를 반드시 하도록 하여야 하고, 향후 모든 건물에 대하여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기획, 설계, 감리 및 시공, 유지관리 등의 건축생산프로세스에서 저작권이

설계 이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문체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하다. 국토부, 산자부, 지경부 등과 건축저작권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협의체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시공과정에서 건축가의 설계의도가 구현되고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건축저작권 신탁회사를 창립할 수 있도록 건축서비스산업을 지원하고, 사진, 이미지 등에 대한 관계성을 명확히 하며, 2차 저작물의 육성과 보호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실행사업 17 ODA사업과 연계한 건축가들의 해외 진출방안 모색

가. 현황과 문제점

- 2014년도 KOICA(한국국제협력단,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가 발행한 ‘대외무상원조실적’에 따르면, 시설관련 프로젝트 총 예산이 약 2,274억원에 해당하고,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미를 비롯한 20개국에 시설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 시설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지원이 있는데, 주로 의료, 교육, 농업, 물 등 생존과 관련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 그밖에 민관협력과 국제기구협력비용도 모두 약 750억원이 사용되고 있다. 문체부는 건축문화진흥과 문화중심의 해외교류를 위하여 외교부와 적극적인 부처간 협조가 필요하다.
- KOICA ODA사업(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에서 시설을 리드하는 건축분야의 발주와 지원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고 있어,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할 중요한 계기를 충실히 만들지 못하고 있다.

나. 개선방안

- 문체부는 한국이 해외원조 받아 지어졌던 건축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KOICA의 원조가 단순한 경제적, 물질적 의미 이상의 것을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외교부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 특히 현재 진행되는 원조사업이 단순한 건축물을 짓는 일에 국한되지 않고, 미래가치를 열어가는 것이며, 중요한 우리 문화의 매개체로서 해당국에 자리매김 할 수 있어야 한다.
- 문체부에 다양한 분야가 있으므로, 건축가를 중심으로 음악, 미술, 영화, 연극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각 분야가 건축을 통해 해당국에 다양한 교류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한국의 건축가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며 해외에 지어지는 건축에 대한 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 건축가를 현지에서 프로모션 할 수 있는 전시, 강연 등의 홍보를 확대하여 현지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품격 높은 문화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발주방식을 개선하여, 기획이 보다 체계적, 전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역량 있는 건축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외교부와 부처간 협조에 노력해야 한다.

실행사업 18 제3세계 해외건축교류 프로그램

가. 현황과 문제점

- 이제까지 우리 건축계의 발전은 유럽, 일본, 미국과 같은 건축선진국을 모범으로 하여 만들어왔다.
-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건축문화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주거환경의 과반을 넘는 아파트 건설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가능성에 대하여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 우리는 오랜 전통의 고유문화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대화 과정에서 일제침탈에 의한 문화단절의 역사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뤄낸 지금까지의 경제성장을 통한 자산축적, 사회발전의 경험과 건축문화 구축의 노력들을 나누기 위한 새로운 방향모색이 필요하다. 건축문화 선진국 따라가기의 노력보다는 유사한 경험을 갖고 있던 제3세계의 국가와의 연대와 공동노력을 통하여 만들어질 수 있는 독자적인 미래 건축문화에 대한 모색이 보다 현실적이며, 필요한 목표가 될 수 있다.
- 한국 건축설계사무소는 세계 100대 규모 회사 중 6개를 차지하고 있다. (2017. 영국건축전문지 'World Architecture') 하지만 이들은 거의 모두 국내 설계시장을 위주로 편중되어 있다.

나. 개선방안

- 선진국 따라가기를 넘어서는 건축교류 확대와 해외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
- 글로벌라이제이션, IT로 통합된 세계의 흐름에 맞춰 주류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동아시아, 인도, 아프리카, 남미의 국가들과 건축문화의 연대와 교류를 통하여 한류에 비견되는 새로운 국제문화 리더로서의 건축문화 교류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경제원조(사업 21) 대상국가와 구체적인 사업을 원조사업,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며 건축문화를 위시한 다양한 분야의 문화교류를 선도하여 추진한다. 이는 젊은건축가 지원(사업 13), 신진건축가 창업지원(사업 14), 건축학과 특화(사업 10)과도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 제3세계를 중심으로 한국과의 건축가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문체부의 각종 행사에 건축가 1인의 프로모션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들 사업은 외교부와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실행사업 19 해외 문화원, 공관 등 해외 건축물의 공간관리,
건축가 지원 프로그램 마련

가. 현황과 문제점

- 해외에 있는 공관과 문화원 등의 신축은 외교부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고, 관련부처의 건축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우리 스스로의 건축문화를 고양시킬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과 부가가치를 챙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미 지어진 건물에 대한 관리와 홍보 프로그램의 준비부족으로 해당국가에 대한 우리 건축문화의 역량에 대한 홍보 등이 미진한 상태이다.
- 문화, 콘텐츠 등을 포함한 복합적인 요소가 무시되고 단순한 건설위주의 지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국건설신문 2016년 12월 29일자 ‘해외건설, 플랜트사업 외교로 지원사격 한다’는 기사에 따르면, 국내기업들이 재외 공관의 지원을 받아 수주한 금액이 7조4천3백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내용들은 모두 건설공사에 해당되어, 입찰 등을 통해 수주를 하고, 가격과 기술경쟁을 통해서 선정되는 일차원적 수주방식에 머물러 있다.

나. 개선방안

- 외교부의 재외공간 상주인력과 문화원 인력의 협조를 바탕으로 건축설계 수주 기회를 확대한다면, 국내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과 건축문화의 도약과 이어지는 건설수주 등에 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으며, 다양한 문화 교류와 함께 우리의 건축문화 확장의 계기가 될 것이다.
- 해외공관 등 해외시설에 대한 공간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다양한 문화, 예술, 건축 관련 프로그램과 현지에서 진행될 사업을 지원하는 배경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건축가 개인의 프로모션을 해외공관과 문화원에서 전시, 교육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여, 우리 건축문화의 해외 홍보와 다양한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 국가별로 2~3인의 전담 건축가를 두어, 각 건축가들의 지역 전문성을 키우고 향후, 국제간 교류 및 지원, 기타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
- 이들 사업은 외교부와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4.2.6. 미래를 선도하는 건축

실행사업 20 건축과 여러 예술 분야와 협력

가. 현황과 문제점

- 후기산업사회의 도시와 지역은 문화로 지탱된다. 후기산업사회는 도시와 지역공간의 개념, 예술과 문화의 개념, 그리고 일자리와 경제에 대한 새로운 개념설정을 요구하며, 이 모든 것은 주로 문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 이 때 문화는, 시민들의 삶의 질과 자긍심을 높여서 시민들의 지역애착을 늘리고, 공간자원과 상징자원을 통하여 지역의 공간문화에 대한 가치를 확대하게 된다. 하드웨어의 공급과 그에 의한 성장을 통해 확장, 과밀화된 도시와 지역에 대하여, 그리고 그 위기에 대하여 문화중심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그 과정은 단순한 건축물과 가로경관의 정비를 넘어서, 이들에 대한 문화적 경영을 포함한다.
- 이러한 과정에 참여하고 주도할 시민과 창의계급의 공간착근과 활발한 신진대사를 위하여, 관련 분야와 행정부서 간의 칸막이는 과감히 허물어져야 하며, 건축과 도시와 여러 예술분야의 협력은 지속적이고 과감히 추진되어야 한다.

나. 개선방안

- 문화를 통하여 우리는, 사적소유의 대상이 되고 있는 도시를 시민 모두에게 열려 있는 공유의 도시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 문화예술의 다양한 장르간의 교류는 당연히 그 콘텐츠를 담당하고 있는 문체부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미래문화를 선도하고 모색해야하는 문체부의 당연한 업무가 되어야 한다.
- 건축문화는 그 속성이 인간사회의 제반 요소의 융합과 현재 실현 가능한 성과물이라 할 수 있으므로 건축분야를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 예술 분야의 교류와 통섭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문체부가 주도해야 할 것이다.
- 이를 모색할 수 있는 다양한 실험의 장이 될 수 있는 전시, 공연, 워크숍에 대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실행사업 21 국가건축실험 프로젝트 제안

가. 현황과 문제점

- 이제까지 건축물은 그 이전에 그 건축이 존재하는 방식을 답습하는 방법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기존의 각종 법규와 규제에 따른 행정운영으로 전혀 새로울 수밖에 없는 미래 건축에 대한 도전과 실현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 국내의 건축은 반드시 성공하고 익숙한 것에만 그 가치를 두고 있어, 새롭거나 국제적이며 미래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 건축을 이끌어내고, 사회와 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의도를 드러낼 기회가 없었다.
- 대부분의 건축가의 도전적인 아이디어는 선례로 증명되지 못할 경우 폐기될 수밖에 없었으며, 외국의 유사 사례로 실현가능성이 검증될 경우에만 일부 수용되곤 했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 이러한 상황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선도적인 시도가 실현불가능 한 상황으로 스스로 한계를 만들어 미래 건축문화에 대한 도전은 전무한 상태이다.

나. 개선방안

- 중소규모 (500~2,000㎡) 정도의 프로젝트를 2년에서 4년 주기로 2개 정도 선정하여 관행, 법규, 예산 등 어떠한 규제도 넘어서는 건축실험 프로젝트를 문체부에서 주도하여 시행한다. 그 대상은 올림픽 등 국가의 중요한 국제행사가 있을 경우 이에 어울려 함께 시도되는 건축페스티벌 형식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실행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 연간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공모를 하여 새로운 아이디어가 지속적으로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러한 국가건축실험 프로젝트를 통하여 우리 문화, 우리의 건축문화의 가능성에 대한 미래비전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두 개의 프로젝트를 추진할 경우 하나는 국내 건축가에게 또 다른 하나는 해외 건축가에게 기회를 준다면 국제건축계의 엄청난 주목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며 이는 미래 건축문화 발전의 국제적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발돋움 할 수 있게 만들 것이다.
- 미래 건축문화의 주역이 될 대학교 건축학과 학생들의 졸업작품전을 대상으로 최우수작 1개를 선정하여 이를 현실에서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도 방법이다. 확보 가능한 예산범위를 정하고, 젊은건축가들이 실현을 도와 줄 수 있는 체계를 만들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며, 이는 건축학과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미래 건축가의 꿈을 앞당기게 만들 수 있는 국가건축실험 프로젝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향후 연구 방향

건축기본법 제정 이후 건설기술로서 건축 이외에 건축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가시적인 성과는 특별히 드러난 것이 없다. 건축기본법에서 제시하는 여러 개념들을 실현시키기에는 건축기본법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구체화할 만한 실현 전략이나 수단들이 효과적이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건축기본법의 내용들은 선언적이기만 할 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제부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선행 연구들에서 제시했던 추진 전략들을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이나 조직들과 접목시켜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찾고자 하였다. 또한 일부는 최근에 발표된 해외사례인 프랑스 국가건축전략보고서를 토대로 장기적 저성장 시대에 접어든 전세계적 상황에서 필요한 건축문화전략 사업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이 결과 총 6개 목표와 25개 실행사업을 제안하였다.

여기서 6개의 전략은, 1) 일반 국민과 행정가 등 다양한 사람들에게 건축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것, 2) 문화예술자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만들고 그 속에서 문화예술향유 기회를 높일 것, 3) 건축문화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건축교육과 연구 여건을 발전시킬 것, 4) 좋은 건축물들을 생산할 수 있는 기획과 발주, 관리 시스템을 갖출 것, 5) 건축자산의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문화산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낼 것, 6) 문화예술로서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실험 기회를 제공할 것, 들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25개의 실행 사업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위한 법제화와 조직구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먼저 건축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홍보사업 및 교육 콘텐츠 개발을 제시했는데, 이러한 사업 기획과 콘텐츠 개발을 위한 기획 인력 운영을 위한 적합한 조직을 구성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함께 제시한 건축문화정보센터가 이러한 조직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며,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건축원 설립 이후 연구 기능이 강화된다면 두 기관 사이의 협력 체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문화예술자산으로 가치가 있는 문화예술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먼저 관련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공연법 등의 등록과 관련된 부분의 법 개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기획 단계 강화를 위해서 제시한 문체부 총괄건축가나 공공건축가 제도를 활용할 경우, 개별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이러한 제도들의 적용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문체부 내의 다양한 부서들과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들 사이의 기획, 발주, 시공, 관리 단계에서 관련 주체들이 효과적으로 협력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 개선이 필수적이다.

건축교육 및 연구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조직 변경을 제안했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과의 조율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연구 조직을 만드는데 있어 현장에 있는 실무 건축가들과 연구 전담 인력의 비중과 운영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와 유사한 조직으로는 네덜란드 국가건축가 산하에 있는 “국가건축가 아틀리에”를 참조할 수 있다.

건축문화 역량 강화를 위하여 기획 및 발주, 운영, 관리를 위하여 건축문화위원회, 대표건축가나 위촉 건축가제도를 제안했다.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상황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선례가 많긴 하지만 문체부의 사업들과 실행 조직의 성격에 따라 문체부에 필요한 시스템을 찾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위촉 건축가 그룹의 경우도 서울시와 같이 건축가풀을 만들어 활용할 수도 있지만, 조직화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와 같이 일정 기간 동안 문체부에 소속된 전문가 그룹으로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대표건축가 제도의 경우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위와 임기, 업무 영역 등을 결정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적합한 실행 조직으로서 행정전담부서가 필요하다. 이 때, 만약 문체부에서 건축문화 전담 부서를 설치할 경우 두 부서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건축의 가치 확장을 위하여 저작권 강화와 다양한 해외 사업을 제안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실험적인 건축을 위하여 비교적 다른 사업에 비하여 열린 형식의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사업들은 아직 목적이나 취지만 제시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를 실천할 경우 먼저 사업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해외 사업의 경우 KOICA나 외교부 등 타부처와의 협력관계 구축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번 연구에서 제시한 위의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첫 단계로서

문체부가 일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각 사업들의 범위가 문체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로 확산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6개 전략 25개 사업은 다음과 같이 확장될 수 있도록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먼저, 건축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부문에서는 장기적으로 발주처 및 행정담당자 대상 건축교육 프로그램 개발뿐만 아니라 국토부의 공공건축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건축 발주를 담당하는 전 부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의무화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교육부와 연계하여 일반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건축에 대한 교육컨텐츠 개발이 실제 교육과정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건축문화 자산 관리에서도 문체부 발주 건축물, 문화예술공간 조성에만 사업이 국한될 것이 아니라 전체 공공시설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 건축교육과 관련하여 한국예술종합학교뿐만 아니라 국토부 및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과 함께 하여 건축교육개선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교육부와 함께 건축교육의 다양화, 전문화를 위한 학제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네 번째, 건축문화위원회 대표건축가는 문체부 내부 사업을 총괄하지만 결국 문체부가 아니라 전 부처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 현재 건축정책위원회는 업무 내용과 범위에서 충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대표건축가 제도를 도입하여 건축정책위원회와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 건축의 경제효과 증대를 위한 방안으로서 해외사업을 제안하였는데, 이 역시 외교부와 협력 체계 마련을 통해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체계 마련에는 위에서 제시한 건축문화위원회, 대표건축가 제도와 건축정책위원회가 방법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문체부 내에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건축문화를 전담할 수 있는 전담 부처가 필요하다. 현재 국토부가 이를 담당하고 있지만 국토부의 근본적인 지향이 국가의 기간산업 건설과 주택 공급 등 양적인 측면에서 국민의 복지를 추구하는 부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생활환경의 풍부함을 통해 질적인 측면에서 국민

의 행복을 만들어야 하는 건축문화 관련된 부분은 국토부와 별개의 부서, 특히 이미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그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 문체부로 이전하는 것을 적극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국내의 건축정책 관련 자료>

제1차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 본보고서, 2010
제1차 서울시 건축기본계획 본보고서, 서울특별시, 2010
제2차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 공청회 자료집, AURI, 2015
제2차 서울시 건축기본계획 공청회 자료집, 건축사협회+건축학회, 2016
Stratégie Nationale Pour L'architecture, Ministe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2016
Stratégie Nationale Pour L'architecture : Rapport des groupes de reflexion, 2015
Danish Architectural Policy : Putting People First, The Danish Government, 2014
Survey on Architectural Policies in Europe, European Forum for Architectural Policies, 2011

<연구보고서 자료>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성과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연구, AURI, 2015
수요자 중심으로의 건축법령 체계 개편 방향 연구, 국가건축정책위원회, 2015
서울 총괄건축가 도입 및 발주체계 개선방안 연구, 서울특별시, 2014
선진국 문화재 보존·관리 규범현황 및 내용에 관한 연구, 문화재청, 2014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의 문화예술 조성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4
국가사회적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건축정책 발전방안 연구, AURI, 2013
한스타일 공공건축물 공급방안 연구, AURI, 2011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 AURI, 2011
건축문화 관련 행사 통합 강화방안 연구용역보고서, 국토해양부, 2010
공공건축가(가칭) 지정제도의 도입 및 그 적용방안에 대한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0
국내건축문화의 해외홍보방안, AURI, 2008
건축문화 중장기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국가 건축문화정책의 방향 제시 및 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건축가협회, 2007

(사)새건축사협의회

책임연구원 권문성 /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책임연구원 신은기 / 인천대학교 도시건축학부 조교수
연구원 박인수 / (주)파크이즈건축사사무소 대표
연구원 김주경 / (주)오우재건축사사무소 대표
연구원 박현진 / HJP ARCHITECTS 건축가
연구원 이진오 / (주)건축사사무소SAAI 대표

자문위원 주대관 / (주)엑토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자문위원 이충기 /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자문위원 윤승현 / (주)건축사사무소인터커드 대표